

경제 정책 하면

나라경제

2012
nara.kdi.re.kr



한-EU FTA 365 한미 FTA 100

이슈
학교 경제교육의 현주소는?

인터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집중토론
한국 인터넷 30년, 성과와 과제는?



한눈에 OK! ‘FTA인트로’ 찾아가자



FTA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요?
관련 기관들이 저마다 달라 일일이 사이트를 찾아다니기 불편했다고요?
이제는 걱정 마세요!

FTA에 관한 모든 것 'FTA Intro(인트로)'가 있으니까요.
기획재정부·관세청·외교통상부·FTA 무역종합지원센터·FTA활용유관기관까지,
5개 FTA 포털의 특화된 정보를 한눈에 OK!!

FTA종합지원포털 | www.ftahub.go.kr | 에서 'FTA 인트로'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지나가는 순간에 내일을 _____ 붙.잡.다.

어머니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30여년째 한복을 짓고 있다. 물론 입는 것, 먹는 것, 집 꾸미기 같이 살림에 재미를 더하는 일에 관심이 더 가기도 한다. 서울 한복판, 삼청동에 있던 한복집은 늘 변치 않는 공간에서 만나는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다. 지금은 그것도 과거.

밤새 피아노를 치는 남편은 늘 안성 외판집에서 아이들과 타잔처럼 산다. 그래서 내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제인이고 건우직녀고 베짚이와 우렁각시다. 그때는 안성과 서울 삼청동 '효재'를 지하철, 버스, 택시를 타고 내려서 걸어 들어가면 왕복 5시간이 걸렸는데, 한나절을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라 친구들에게는 4시간 걸린다고 줄여서 말했다. 지금 이야 웃음 나는 추억이 되었지만...

가끔씩 지방으로 곡을 쓰러 떠나는 남편 덕에 혼자 삼청동에서 지냈다. 그럴 때면 가까운 서소문에서 놀러오는 친구들이 있었다. 벚꽃 핀다고, 초파일 등 본다고, 은행잎이 연초록빛을 띠었다고, 비가 온다고... 친구들은 삼청동 '효재'의 대문 열쇠를 복사해서 핸드폰에 걸고 들락거렸는데 수다를 어찌나 많이 떨었는지 저녁을 두 번씩 먹을 때도 있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

그렇게 놀다가 한 친구가 책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참 별스럽기도 하지. 사람 사는 거 다 같을 텐데 사는 얘기가 책이 될까?

그리고는 그 길로 산 속 집에서 일주일을 계획하고 합숙을 시작했

다. 도통 마음이 잡히지 않았던 나는 3일을 청소만 했다. 진행을 맡은 친구는 내게 잔소리도 못하고 가슴이 타는 눈치고, 사진을 맡은 실장님은 담배만 피워댔다. 스태프들은 산모기 등쌀에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

청소를 마치고 4일째, 아무렇지 않게 주변에 지천인 산나물로 만든 반찬과 살림도구들로 살림일기를 사진과 함께 정리하고 기록했다. 그렇게 별스럽지 않게 4일 만에 사진 찍고 정리해서 내놓은 '효재처럼'이 세상에 나왔다. 친구들과 나눴던 수많은 수다 중에 하나였던 말, '책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순간이 바뀌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은 바람을 타고 방승을 타고 알려졌고, 연이어 책들이 나왔다. 한복에서 보자기로의 새로운 작업도 주목받고 있으며 패션전시도 한다. 동화책도 나왔다.

나는 삼청동, 작지만 자연을 닮은 마당이 있는 '효재'에서 한복을 지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남편이 곡을 쓰러 가는 날이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같은 순간들로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 순간이 내게 너무 쉽게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웃고 떠들던 그 한가로운 일상 속에서 만났으니 그럴 수도. 하지만 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누구와도 다르지 않게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변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 순간까지 살아온 시간 때문인 것이다.

모두가 일상에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다. 지나가는 순간에 귀 기울이고 결정하는 순간이 각자 다를 것이다. 나의 그 순간은 모든 시간을 변화시켰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나고 함께하려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일 게다. 이제 보지만 말고 만나자. 

Lee . Hyo . Jae



이효재 한복 디자이너

한복집 '효재'(效齋)의 디자이너. 자연주의 살림꾼으로 불리며 「효재의 보자기 놀이」, 「효재처럼 풀꽃처럼」, 「효재처럼」 등의 책을 냈다.

SPECIAL THEME

특집



한-EU FTA 365 한미 FTA 100

08 “FTA 가격인하 효과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줄 것”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10 ‘FTA 효과’ 가시화 노력 속도감 있게 추진

박일영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장

12 통합무역정보시스템에서 FTA 수출 정보 한눈에

윤상흠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

14 농업 보호 확실히 하고 수출 확대까지!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16 주요 소비재 22개 품목 가격 동향 집중 점검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18 EU·美 이어 中·日·캐나다… 전방위 FTA 계속된다

박종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20 FTA 성과, 일자리 창출·국민후생 증대로 이어져야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40 “지금 이 국가에 봉사할 마지막 기회… 스마트 생태계 구축에 최선 다할 것”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정책해설 Plus _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56 빈곤 독거노인에 일자리 우선 제공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58 “독거노인 마음 읽는 게 중요… 경제적·정서적 지원 동시에”

성미선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59 “살아생전 그렇게 좋은 세상 처음 봤소”

김봉애 ‘어르신 세상나들이’ 참가자

60 “주먹밥이 먹고 싶다”… 굶어 죽는 일본인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일본학과 겸임교수

61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수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제정책해설

64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중동’을 품다

조용환 지식경제부 중동아프리카협력과장

66 최고의 숙련기술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송민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69 연구현장 자율성 대폭 확대… ‘성실실패제도’ 도입

박구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장

71 물산업 해외진출 2017년 50억달러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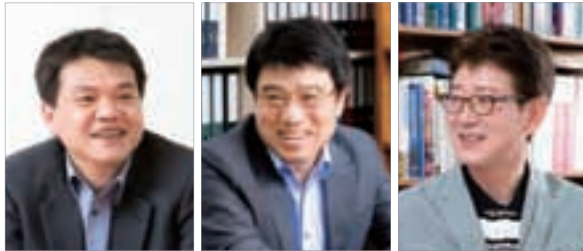
차동민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건축과장

40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집중토론

22 한국 인터넷 30년, 성과와 과제는?

최종원 숙명여대 컴퓨터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외신보도 분석

76 장기화되는 유로존 사태, 위기 대응능력 강화하는 한국

이선하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77 '유예된 그리스 위기' 유로존 어디로?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03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지나가는 순간에 내일을 붙잡다
이효재 한복디자이너

27 김광일과 함께 읽는 책

「독한 충고」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라경제 인사이트

5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절묘한 선 긋기, 가능할까?

김광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52 이슬람금융 도입, 핵심은 무엇인가?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

연중기획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

92 "기술 통해 자립 기반 다지면 다문화가족 삶의 질까지 좋아져"

이상덕 한국폴리텍대다문화교과교장

94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 올바른 용어사용부터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처장

이슈

학교 경제교육의 현주소는?

30 "경제교육의 핵심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박병원 한국경제교육협회장

32 현실과 동떨어진 학교 경제교육 ... 내용 어려워 학생들도 '외면'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33 부담 많아진 중학교, 경제교육 공동화 우려되는 고등학교

김경모 경성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34 사범대에서 경제지식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은 2~3개에 그쳐

김중호 서울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35 '경제적인 사리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오영수 경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36 "경제 교과서와 수능 난이도 비슷하게 맞춰야"

박철용 서울사대부고 사회과 교사

37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전방위적 노력 확산

이인옥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장

38 반시장으로 치우친 학교 경제교육 개선 시급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세계는 지금

80 최근 경제위기로 가속화된 OECD 연금개혁

송홍석 주OECD대표부 참사관

83 IMD가 제시한 한국의 2012년 정책과제는?

이상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86 유로존의 위기 방화벽, EFSF와 ESM

이명순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재경관

89 중국 에너지절약 환경설비시장에 주목!

김종복 KOTRA 중국 시안 무역관장



칼럼

39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편지

섬진강에서 바이칼 호수를 보았다
이원규 시인

46 오소희의 '사람여행' - 볼리비아

생(生)은 기능성의 덩어리
오소희 여행작가

54 도시농부의 농사일기

열매도 풍성, 잡초도 풍성한 7월
김지숙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신문』 편집장

73 창의성을 기르는 생각 3.0

창의성을 계산하라; 3차원과 수학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74 세상에 없던 직업

테크아트주얼리
김현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78 경영전략 특강

'리스크 관리', 핵심적이고 간결한 프로세스가 핵심
김수옥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95 향기 나는 삶

아프리카 IT 허브를 꿈꾸는 르완다에서의 2년
김준우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96 그림의 결과 속

자크 루이 다비드의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98 시평

경제위기와 언론의 반성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2. 07 [제23권 07호 통권 260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현오석 KDI 원장
편집인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관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민상기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오대석 기초과학정책과장 외교통상부 김영준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박형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황승현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황계영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민석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윤성원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동환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이진민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이재열
취재·편집기자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양은주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7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8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2년 6월 30일(매월 말일 발행) 제23권 07호(통권 260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주)성우애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3개. 국제연합(UN)의 가입국.

일반 국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여개 나라를 포함하면 지구상에는 대략 200여개의 크고 작은 국가가 존재한다.

45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페루, EU, 미국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세계 각국의 무한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나라경제』가 한-EU FTA 1년, 한미 FTA 100일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한-EU **FTA** 365
한미 **FTA** 100



SPECIAL
THEME

한-EU FTA가 1년, 한미 FTA가 100일을 맞았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교역, 투자 등 주요 지표에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까지 대세계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간 대세계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11.3% 증가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EU 수출은 감소 추세다. 그러나 자동차, 석유제품 같은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FTA 허브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FTA 효과, 즉 가격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한미 FTA는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지금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지 않나. 물론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와인 같은 15% 관세율이 즉시 철폐됐다.

가격인하는 물론 가격경쟁을 유도해 최대 30%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FTA 발효 전 1개당 1,350원 하다가 발효 후 최저 980원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일부 품목에서 관세가 인하됐으나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관세 인하폭이 적거나 유통구조, 독과점식 가격책정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나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실제 기업들의 FTA 활용은 어떤가?

아세안, 인도와의 FTA 경우 활용률이 30%대로 낮으나 미국과 EU는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60%, 80%로 비교적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도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FTA 활용 성공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적극 발굴해 FTA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겠다.

중소기업들이 실제 FTA 활용 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FTA 활용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보니 FTA 관련 지식 부족, 전문인력 부족, 절차상(원산지 판

“FTA 가격인하 효과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줄 것”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련)의 까다로움을 주로 지적하더라. 이 외에도 FTA 상대국 시장정보 확보, 자체 FTA 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들이 FTA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 종합지원체제인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지난 2월 한국 무역협회에 설치했다. FTA 활용지원협의체를 운영해 범정부적 지원기반도 구축했다. FTA 컨설팅, 지역 FTA 활용센터 지원, 대학 FTA 강좌개설 지원, 교육·설명회, FTA 포털 정보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 좀 더 구체적인 접근도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관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FTA 활용정책협의회에서 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FTA 컨설팅 사업의 기관별 중복을 없애고,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 및 원산지 관리 '간편판정 FTA-Pass시스템'을 마련해 원산지 관리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가 높다.

FTA는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장기적으로 약 35만개, 한-EU FTA는 약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을 높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의 시장개방 확대,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나 제조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은 방송·통신 분야와 컴퓨터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보안전문가,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DB 관리자 등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직접 피해보전과 함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21조1천억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의 보완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24조1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면세유 등 세제지원 29조8천억원을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이다. 재정지원뿐 아니라 농어가·중소상공인 영농·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도 마련했다. 이를테면 농축어가 소득비과세 범위 확대, 피해보전직불 및 무역조정 기준 완화,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FTA 이행센터 설치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마련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됐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중 FTA의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2.28~3.04%, 고용은 24~33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철폐와 더불어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개방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의 취약 분야는 중국산 제품 확대로 피해가 우려된다. 협상과정에서 민감 분야 배려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한중 FTA는 1단계에서 양국 간 민감품목에 대해 합의되는 경우에만 2단계 협상(본격적인 양허안, 텍스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앞으로 계획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FTA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FTA 효과 극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FTA가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그 효과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FT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하다. 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의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가격 모니터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 등이 있어야 정부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FTA 효과’ 가시화 노력 속도감 있게 추진



박일영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장
jypark@most.go.kr

◎ 우리가 FTA를 적극 추진하게 된 이유가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자는 데 있으므로 그 성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 100일(6월 22일), 한-EU FTA 발효 1년(7월 1일)을 맞이해 그간의 실적과 평가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다. 몇 년간에 걸친 협상과 비준과정을 통해 어렵게 FTA를 발효시킨 만큼 이 소중한 기회를 시작부터 잘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FTA가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는 절박한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식해 FTA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관세인하 품목 가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미 FTA가 발효되자마자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관세장관회의를 통해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 4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보완대책 등을 통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이 제시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를 구성했

으며 4월 초부터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적지 않은 대책들이 마련됐다. 요즘 '스몰볼'(미시정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FTA 활용 지원정책도 현장에 있는 기업, 특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애로사항·요구사항을 반영해 미시적이면서 체감도가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FTA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 기관별 중복을 없애고 소외되는 기업을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FTA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FTA 대학강좌를 보강·확대하는 등 인력양성 방안, 이용자 편의 위주로 FTA 온라인 포털을 개선하는 방안,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요인 중 하나인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의 개선 및 원산지 확인서 활성화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 후생 부분도 마찬가지다. 10개 연구기관이 한미 FTA로 인해 321억달러의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주는 품목들의 가격이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FTA 발효로 관세가 상당폭 인하된 주요 품목들을 대상으로 매주 소비자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 현재 약 6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효 1년에 접어드는 한-EU FTA는 80%가 넘는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발효 초기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교역이나 품목별 소비자 가격 등의 주요 지표들이 FTA 발효 이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격정보 제공 및 유통구조 개선 병행 추진

이러한 대책들은 FTA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고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FTA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경쟁



01



02

01 지난 3월 1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기념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2 지난해 7월 1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EU FTA 발효 기념 리셉션'에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토마쉬 코즈워프 스키 주한 EU 대사가 각각 축하의 연설을 하고 있다.

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FTA로 인한 취약산업 지원을 위해 세차례에 걸쳐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08년부터 10년간 실시될 총 5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에는 시설현대화, 농기계 면세유 공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모두 망라돼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완대책과 함께 FT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는 농어업인들의 성공사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올해 중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라는 목표도 피해산업이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고의 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점은 FTA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FTA 허브효과를 얻기 위해 생산·판매 거점으로서 한국을 투자처로 고려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 열린 미국, 일본에서의 투자설명회에서 외국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투자유치 실적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FTA의 혜택, 정부의 지원노력뿐만 아니라 외신 등 해외에서의 반응을 통해서도 FTA에 대해 보다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 당시부터 주요 외신들은 FTA로 인한 한국의 시장선점, 농업경쟁력 강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IMF에서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6월 12일)하면서 한미 FTA와 한-EU FTA가 한국의 성장세를 확대하고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낙관적 평가에 안주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이러한 평가와 기대를 실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초기 단계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FTA 체감효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FTA 활용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는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제공과 함께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이 병행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까지 포함해 투자환경 개선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발효 5년, 10년 뒤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FTA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중요 전략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미 FTA 100일, 한-EU FTA 1년을 계기로 우리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미경제**



윤상호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
syoon63@mke.go.kr

◎ 국회비준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지 각각 100일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이제는 FTA 체결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미와 한-EU FTA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았던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해 온 덕분에 발효 초기임에도 활용 성과는 괜찮은 편이다. 한미 FTA의 경우 5월 말까지 두 달 반 동안의 수출활용률이 59.4%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 3.5%, 한-인도 17.7%)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며, 한-EU FTA의 경우 수출활용률은 80.1%다. 이는 한미, 한-EU FTA의 개방수준이 높아 관세절감 유인이 크고, 컨설팅·설명

회는 물론 한-EU의 경우 주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이행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활용률은 수출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약 두 달 반(3월 15일~5월 31일) 동안 대미 수출은 8.4% 증가한 142억달러, 수입은 4.2% 감소한 99억달러로 4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석유제품 등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18.1% 증가했으나 비혜택품목은 3.2% 증가에 그쳐 FTA 효과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올 5월 말까지 전체 수출증가율이 0.5%에 불과한 데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미 FTA가 많은 기여를 한 것이다.

한-EU FTA는 발효 11개월간(2011년 7월 1일~2012년 5월 31일) 대EU 수출은 467억달러, 수입은 450억달러로 1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 흑자폭이 크지 않고 올해 들어 대EU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라 수입수요가 감소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선박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박수출이 감소한 데 주로

통합무역정보시스템에서 FTA 수출 정보 한눈에

지난 2월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정부 및 무역협회 등 주요 FTA 활용 업종별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기인한다. 그러나 대EU 수출에서도 FTA 혜택품목과 비혜택 품목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자동차·자동차부품·석유 제품 등 혜택품목은 22.1%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은 32.6% 감소했다. 즉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가 대EU 수출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이와 같은 지표상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애로는 원산지 증명과 해외시장 진출로 요약된다. 먼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는 FTA별로 원산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며, 거래처가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고, 높은 비용, 전문인력 부족, 전산시스템 미비 등 중소기업 자체의 관리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FTA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좋은 기회이지만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각종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해 해외관로를 개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해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지난 2월 21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가 출범했다. 한국무역협회 내에 설치된 이 센터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와 함께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 합동기구이며, 관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애로상담만이 아니라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원산지 증명의 경우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기업을 방문해서 해당 품목의 HS 분류에서부터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를 충족하기 위해 부품·원자재 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컨설팅함으로써 기업이 완전히 습득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들의 경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FTA 활용지원센터가 있는데,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 서울의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파견, 상주시키고 있다.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통해 관세율 등 각종 규제 정보 제공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기업 내에 종합정보시스템(ERP)이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높은 구축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무역종합지원센터는 IT 전문가를 파견해 'FTA-Pass'(관세청)나 'FTA-Korea'(한국무역정보통신)와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실제로 해당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원산지 증명 다음 단계는 바로 해외 마케팅이다. 무역종합지원센터와 코트라는 공동으로 'FTA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해 FTA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즉 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코트라는 신규 바이어 발굴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발대식을 개최해 40개 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 외에도 수혜품목 대상 전시회 개최, 국내 부품업체와 글로벌 완성차업체와의 파트너링 강화, 글로벌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매시장 진출,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정보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시장정보 외에도 상대국의 수입규제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FTA 관련 국가별·품목별 다양한 무역정보를 단일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www.tradenavi.or.kr)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품목별 관세율(기본관세율 및 협정관세율)은 물론 원산지 표시, 규격, 기술규제, 환경규제 등 해당 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하는 데 관련된 각종 규제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EU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2월에는 미국에 대한 관세율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에 대한 종합정보는 하반기에 제공될 예정이다. FTA를 이미 체결한 인도와 아세안에 대한 정보도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FTA를 통한 수출확대·투자유치는 산업생산 및 일자리 증가,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이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FTA의 국내경제 활성화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남 진주시의 한 파프리카 농장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농업 보호 확실히 하고 수출 확대까지!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young68.an@gmail.com

◎ 지난 2006년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한미 FTA가 2011년 11월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전체 협상 대상 농산물 및 수산물의 32.8% 수준인 636개 품목(전체 1,938개 품목, HSK 세번 기준)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즉시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관세철폐가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예를 들어 관세가 즉시 철폐된 커피, 사료용 옥수수, 포도주 등의 농산물과 갯지렁이, 부화용 알 등의 수산물은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계절관세 도입, 관세철폐 유예 등 다양한 보호장치 마련

우리 농어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적용, 계절관세 도

입, 관세철폐 유예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왔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해 지난 3월 15일부터는 37.3%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관세철폐 기간 동안 농산물 셰이프가드가 적용된다.

감귤류(오렌지)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비출하기에는 인화된 관세가 적용되지만 성출하기에는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인하폭이 작아진다. 수산물 중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특히 쌀 및 쌀과 관련된 쌀가루, 찹쌀 등 16개 세번(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 생산액은 앞으로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연평균 8,445억원)이 감

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 분야는 7조2,993억원(57.7%)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으로 과수 분야가 3조6,162억원(28.6%)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여·야 13개 합의사항'(2011년 10월 31일)을 반영해 총 54조원 규모(재정 및 세제 지원 포함)의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추가보완대책의 19개 세부 대책 중 14개 대책은 이미 후속조치 추진을 완료해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대책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 가격을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해 보다 강화된 농어업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축산농가에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돼지 사육농가의 비과세 공제두수 범위를 소는 30→50마리, 돼지는 500→700마리로 확대하고, 연근해·내수면어업을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1,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 중 1만4천호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인 등 지원센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어업인 등 지원센터)을 협정 이행과 관련된 대농어업인 서비스센터인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로 지정해 주요 품목의 수입량 및 가격 정보 제공,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성공 및 지원 사례 교육·홍보, 협정 대상국에 대한 수출 안내 등 대농어업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축사·과수원·양식장 등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 규모를 2011년 2,450억원(지원대상 1만2천개소)에서 2012년에는 7,002억원(지원대상 1만7천개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향후 시설현대화 추진 기간을 단축해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전략 통해 올해 100억달러 농수산물 수출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발농업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발농업직불제가 2012년부터 신규 도입됐다. 즉 밀·콩·옥수수·고추·마늘 등 19개 발작물을 재배하는 68만1천농가에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조건불리 수산직

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지역 어가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4,415어가에 어가당 연간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확대해 약 2만7천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가공·포장 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등 산업용 전기료 적용을 받는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로 대상시설은 전기료가 감소돼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보완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더불어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 전략을 통해 2011년 6억달러 수준이었던 대미 수출액을 2012년에는 7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려 한다. 이를 위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 김치·소스류 등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품질 및 보관성이 좋은 버섯류·과실류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관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현지 대형 유통업체 판촉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출 등 현지 유통망 진출 확대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계 무대의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07년 38억달러 수준에서 2011년 77억달러를 달성해 4년 만에 두 배로 빠르게 성장한 점을 보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100억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전략품종을 개발해 2030년까지 30억달러 수준의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신규 도입했으며, 성장 가능성, 농어가 소득증대 효과가 큰 25개 수출 전략품목의 중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전략품목으로는 인삼·김치·파프리카·버섯·사과 등 10대 신선식품과 소스류·조제분유·막걸리 등 5대 가공식품 그리고 김·넙치·굴·전복·해삼 등 수산 10대 전략품목이 포함돼 이들 품목을 수출 스타 품목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조달 시장 등 새로운 수출루트를 발굴하고, 현지 주재관을 통해 식품 표시사항, 동식물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등 FTA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FTA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소비재 22개 품목 가격 동향 집중 점검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mjcl125@naver.com

◎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됐던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0일이 넘었고, 한-EU FTA도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다. 이론적으로 FTA는 당사국 간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인하해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격은 낮추고 거래량은 늘려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FTA로 인한 편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인하가 직접적인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독과점적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마진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FTA 관련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2개 품목 중 15개 품목 가격 최대 50% 인하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조해 4월부터 FTA 관련 주요 소비재 중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폭이 큰 품목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 품목(EU산 9개, 미국산 13개)에 대해 매주 소비자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격 모니터링 결과 201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22개 품목 중 15개 품목의 가격이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인하돼 FTA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자세한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EU산의 경우 9개 품목 중 전기다리미(26.5%), 전기면도기(4.4%), 와인(32.8%), 유모차(10.3%), 승용차(1.3%)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삼푸 등 4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됐다. 미국산은 13개 품목 중 오렌지(4.6%), 체리(29.2%), 오렌지주스(8.6%), 포도주스(8.6%), 와인(50.0%), 맥주(19.0%), 아몬드(8.8%), 스위트콘(15.6%), 승용차(2.9~7.0%), 냉장고(5.5%) 등 10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반면 호두, 삼푸, 치약 등 3개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거나 가격이 상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 위원장 현장점검,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정보 공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월부터 EU산, 미국산 주요 소비재 2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소비자원 모니터요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대형 유통업체 특정 점포의 실제 판매가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5일 백화점(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대형마트(김스클럽 강남점)를 방문해 EU산 소형가전제품·프라이팬·위스키, 미국산 오렌지·아몬드·과실주스·맥주·와인 등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들의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인하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한편 현장점검 이후 일부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도 했는데, 테팔의 경우 전기다리미 가격을 8%, 농심의

〈표〉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

	품목
EU산 (9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와인, 위스키, 유모차, 삼푸, 프라이팬, 승용차
미국산 (13개)	오렌지, 체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와인, 맥주, 호두, 아몬드, 스위트콘, 삼푸, 치약, 냉장고, 승용차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과일 중 유일하게 무관세 혜택을 받은 캘리포니아산 체리를 선보이고 있다.

경우 웰치스 오렌지 · 포도주스 가격을 8% 인하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해 일부 가격하락이 미미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 채널별 가격수준 및 그 원인 등을 포함한 심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먼저 5월 18일 소비자원은 전기다리미의 경우 FTA 이후 EU산 2개 제품의 가격이 3.7~12.7% 하락했고(수입가격은 평균 15.1% 하락), 소비자 가격이 수입가격의 2.3배에 달하며, 백화점에 비해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이 평균 38% 저렴하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6월 1일 발표한 자료에서 프라이팬의 경우 FTA 이후 EU산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의 가격이 4.7~20.1% 하락했고(수입가격은 평균 8.3% 하락), 소비자 가격이 수입가격의 2.9배이며, 백화점에 비해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이 평균 30% 저렴하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6월 8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위스키의 경우 FTA 이후 EU산 15개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평균 0.23% 상승했고(수입가격은 평균 1.41% 상승), 소비자 가격은 수입가격의

5.1배에 달하며, 백화점에 비해 대형마트의 가격이 평균 9% 저렴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업체가 유통업체에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제품을 예로 들면서 FTA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당수 제품의 가격이 실제로 하락했다. 또한 가격수준이 높은 이유는 소수의 수입 · 유통업체들의 유통마진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FTA 이전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며, FTA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높은 유통마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품목별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병행수입 활성화, 국내업체 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도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필수



지난 5월 2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EU · 美 이어 中 · 日 · 캐나다...전방위 FTA 계속된다



박종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jhpark97@mofat.go.kr

◎ 비교적 최근 이행된 한미 FTA와 한-EU FTA는 큰 문제 없이 이행돼 왔음은 물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한미 FTA 수출활용 59.4%, 한-EU FTA 수출활용 80.1%)이 예상외로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어떤 FTA보다 조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EU, 미국과의 무역 내역을 보더라도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은 발효 후 2개월간(2012년 3월 15일~5월 14일) 189억1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EU와의 무역액은 발효 후 10개월간(2011년 7월~2012년 4월) 826억8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감소(0.9%)했으나 EU의 경제위기 속에서 FTA 특혜를 받는 자동차, 유류 일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건설장비 등의 품목들이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해 FTA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로 인한 가격 이익 활용해 시장확대 도모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무역액의 증가와 더불어 한-EU FTA 발효에 이은 한미 FTA 발효가 한국에 대한 투자

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성과를 근거로 앞으로의 FTA 효과를 낙관적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발효는 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두 FTA를 보다 탄탄한 대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정부나 민간 모두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민간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피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더라도 특혜 관세혜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한 서한을 EU와 교환한 것이 그 예다. 미국과는 특혜관세혜택 적용에 있어서 이행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실제로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와 6월 7일 개최된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다양한 세관행정 관련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아직도 FTA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또는 FTA를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FTA를 활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도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작업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해외에 있는



지난 1월 20일 터키에서 열린 '한-터키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잠재적 수요처들이 한국상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FTA로 인한 가격 이익을 활용해 시장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또는 업계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설명회를 통해 FTA의 이익을 소개하고 있다.

이행체계를 다지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작업들도 만만치 않다. 한미 FTA의 20개 위원회와 한-EU FTA의 15개 위원회를 운용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이행이 유예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내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행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난 6월 8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1차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한미 FTA ISD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이 한 예다. 이행 초기인 만큼 일부의 선부른 오해가 불필요하게 현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FTA 상대국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EU의 경우 일부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문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의약 약가 결정 관련 불만사항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 모두 협정의 전반적 균형이나 서로의 이행체계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이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서는 실제로 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렵다는 이유로 원산지 증명을 아예 포기하거나 FTA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막연히 어렵겠거니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FTA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새로운 수출품목



지난해 3월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 페루 통상관장부 장관이 한-페루 FTA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발굴이라는 놀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나 한-EU FTA가 자리 잡는다면 우리 무역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과의 FTA 통해 세계 최대 내수시장 선점

정부는 우리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2011년 기준 2,206억 달러)과 이미 FTA 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이어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진행했다. 중국이 가공무역이 아닌 내수촉진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어 우리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계속 비중이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일본과의 FTA도 대일본 수출을 확대하고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하는 데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상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와의 FTA 협상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FTA 시너지 효과, FTA 허브 효과가 더욱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의 FTA도 같이 진행함으로써 기존 아세안과의 FTA를 양자적으로 보완해 추가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특혜는 우리에게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환태평양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의 움집임이라든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경제통합 논의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한 발자국 뒷걸음질치는 것이다.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의 FTA 정책이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북관계

FTA 성과, 일자리 창출 · 국민후생 증대로 이어져야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발효시킨 이래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 결과 불과 10여년 사이에 45개국과 FTA를 타결, 발효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60%가 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한 소위 FTA 선진국이 됐다. 이제 협상 중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과의 FTA만 타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북중미와 남미,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핵심 국가 및 경제권과 FTA망을 구축한 명실공히 글로벌 FTA 허브국가가 되는 것이다. 좁은 국토면적에 부족한 자원, 협소한 내수시장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와 같이 넓어진 우리의 경제영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가다.

상대국 관세행정에 맞춰 차별화된 FTA 전략 필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특혜관세 활용실적을 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칠레나 EU와의 FTA는 우리 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90%에 이른다. 반면 아세안 및 인도와의 FTA는 우리 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30%대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국가

별로 FTA 관세행정의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통관절차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국가와의 FTA에서는 예외 없이 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다. 반면 통관에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됐어도 그것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무용지물이다. FTA 상대국별로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발전 정도에 상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관세행정이 불투명하거나 자의적인 국가와의 FTA는 관세철폐 수준 자체보다 FTA 발효 이후 약속한 사항의 점검과 미이행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전개될 사회주의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기업들이 통관현장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FTA 효과 극대화의 필수조치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두 번째 제언은 국내 문제로, FTA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과 홍보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FTA 협상은 상대국과 하는 것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결된 FTA에 대해 잘 알고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FTA를 둘러싼 찬반 분열의 극심한 국민적 갈등은 그 소모적인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업인의 FTA 활용제고 의지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FTA의 부정적인 면만 각인시키기 쉽다. 따라서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FTA의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을 실생활에 맞춰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맞춤형 자원과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는 필수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 증명 지원도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와 관련 협회에서 'FTA-Pass', 'FTA 닥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 특성과 능력이 매우 다양하다. 그야말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강한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내수에 몰두하다 영어로 된 외국의 주문서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수출은 엄두도 못내는 순수토종 중소기업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평균적 지원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편 FTA를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개방 확대를 통해 외국의 우수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뒤쳐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 확대를 통한 산업 및 기업의 구조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산업과 기업을 양분화한다. 문제는 경쟁에서 뒤쳐지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낙오하는 기업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아깝게 낙오하는 부류로 기술력이나 제품의 품질, 디자인, 광고 등에서 근소한 차이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아예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기업이다. 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기업들은 정부의 일정한 지원과 자체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외국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가운데서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후자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진다. 당연히 이러한 기업들의 구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우리 내부의 산업 경쟁력도 올라간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효과가 최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후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제도를 투명화하는 내부의 제도혁신과 선진화가 관건이다. FTA를 통한 기대이익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5만달러, 무역 2조달러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로서 FTA를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는 날을 그려본다. 



사회통합 가속화하는 스마트 혁명 이뤄야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때 _ 2012년 6월 13일 오전 10시
곳 _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_ 최중원 숙명여대 컴퓨터학과 교수(좌장 겸)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최중원 1982년 5월 경북 구미 전자기술연구소(KIET)와 서울대 간 TCP/IP를 이용한 SDN 연결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사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오늘 이 자리에선 지난 30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인프라, 인터넷 문화, 스마트 혁명과 관련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1994년 한국통신(현 KT)의 KORNET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1998년 두루넷의 초고속 인터넷 상용 서비스 그리고 광대역 통합망(BcN)을 거치면서 인터넷 이용자수가 1999년에 1천만명을 돌파했고, 지금은 약 4천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디지털기회지수, UN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온라인 참여자수 등에서 세계 1위를 했고,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HSDPA(휴대폰을 통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3세대 서비스인 W-CDMA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로 3.5세대라 불리기도 함)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난 30년간 세계를 리드하는 인프라 강국으로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장석권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닷컴이라는 제1의 인터

넷 혁명이 관성이 붙어 발전할 시기에 한국은 정보통신 부 주축로 통신시장 개방 물결이 일어났다. 그때 모든 분야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지역전화, 시내전화 부문에 하나로통신이 시장진입을 했다. 이미 포화상태라고 생각되던 전화시장에 하나로통신이 ADSL(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ADSL이 우리 통신시장에 불을 지폈다. KT가 반격모양을 취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ADSL이 규모의 경제를 갖는 형태로 커져 이용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ADSL 보급률을 높지게 됐다. 그것이 한국이 초고속 통신 선도국으로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김정렬 그 당시 정보통신부는 인프라 측면에선 네트워크 구축, 공급 측면에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수요 측면에선 공공은 정보화프로젝트, 민간은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쳤던 것이 인터넷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1990년대 말은 민간의 벤처정신이 어느 때보다 충만했던 시절이었다. 그 열정이 인터넷 산



최종원
숙명여대 컴퓨터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정부는 그것을 적절하게 도왔다고 본다.

최종원 덧붙이면 정부의 ICT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 그리고 ICT 기술과 산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없을까.

장석권 기대하는 것만큼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얻었는가라는 측면에선 아쉬운 점이 있다. ADSL이 한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 삼성전자는 컨버전스 기기에서 전 세계를 리드해가고 있었고 통신 3사는 컨버전스라는 이름을 내세워 위성 DMB,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강구했다. 또 현재 SNS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러브스쿨, 미니홈피, 싸이월드 같은 것도 그때 이미 나왔다. 즉 전 세계 IT를 한국이 리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스카이프처럼 룩셈부르크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만든 것이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는 성공 케이스를 못 만든 거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분히 한국적이었던 것이 문제였다.

김정렬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글로벌화가 되기 위해선 처음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시장을 분석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뒀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최종원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디도스 공격 등이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보안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 30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선 이쯤 정리하고 인프라로 넘어가 보자.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인터넷 전송속도라든지 어디서나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에 놀라워한다. 세계적인 인프라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김정렬 한국은 2000년대부터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네트워크가 잘 구현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비디오 콘텐츠 같은 서비스도 네트워크가 좋

현재 스마트 혁명은 B2C 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개인적 차원의 스마트한 서비스가
대다수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 환경, 도로 등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스마트 혁명은 사회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장석권 교수

아야 된다. 다들 느끼겠지만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무
선트래픽(traffic; 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시간 내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네트워
크가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래를 대
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앞으로 10년 후쯤엔
전체 가정이 광케이블로 연결돼 지금보다 속도가 100배
빠른 10기가bps가 되는 것이 기본목표다. 또한 네트워
크의 고도화와 함께 네트워크가 효율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트래픽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따라 1기가에서 10기
가로 네트워크가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현
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종원 김 과장께서 말씀해주신 게 바로 미래 인터넷 분
야에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6~7년 전부터 미국
과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인터넷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15~20년 후의 인터넷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
라에서도 미래 인터넷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확
장성, 이동성, 보안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질성, 서비스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한 방향 등
에 대해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과장 말씀
을 듣다 보니 데이터 익스플로전(data explosion;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문제가 궁금해진다. 얼마 전 KT
가 삼성의 스마트 TV 서비스를 차단했듯이 망중립성 문
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이 있
다면 말씀해 달라.

김정렬 아시다시피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서
비스업체들이 네트워크에 편하고 쉽게 접근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에 투자한 통신업체들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네트워크에 투자
하면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투자 회수가 괜찮았다. 요즘
그 부분에서 통신업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이고 우리 서비스업체가 빨리 글로벌화해야 하는 부분
도 있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앞으로 어
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 건가는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논
의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권 잠깐 보완하면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비
롯한 여러 나라에서 원격으로 고해상도 수술영상을 보
낸다는지 하는 차세대 인터넷 시범사업을 많이 수행했
는데, 시장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인터넷의 방
향성에 대한 초점이 속도만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현재
데이터 익스플로전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이
에 따라 멀티 플랫폼에서 트래픽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플랫폼의 통합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는 과연 속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냐다. 사
실 인터넷에서 흘러 다니고 있는 트래픽의 90% 정도 코
다. 그래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콘텐츠 딜리버
리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인터넷 통신망의
용량 확장 없이 캐싱서버와 웹스위치 등을 이용해 콘텐츠를 최
대한 사용자 가까이에서 옮겨 전송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는 최첨단 서비스)다. 한국은 그동안 속도 중심으로 발전
해 왔는데, 콘텐츠 딜리버리를 해주는 클라우드 환경에
서 우리가 과연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위
기감이 있다. 이제는 속도에서 앞선 국가에 걸맞게 콘텐
츠 딜리버리 같은 역량까지 갖추나가야 한다.

최종원 두 분 말씀은 인프라 측면에서 선도국 지위를 계
속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으
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우리가 교통량이 많



김정렬 과장

어려서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로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인터넷 활용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원 교수

클라우드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접속해 빌려 쓰는 건데 기존의 법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것에 맞춰져 있다.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가 확산되려면 이런 것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주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진다고 계속 길을 넓힐 수는 없는 만큼 어떻게 하면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제 인터넷 문화 쪽 얘기를 해보자. 최근 비속어 사용이라든지 명예훼손, 유해정보 유통 같은 문제가 부각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장석권 인터넷을 세대로 파악하면 지금은 2세대라고 생각한다. 1세대는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등 주로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문화적 측면이 약했고, 산업 혁신의 드라이브 역할을 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2세대, 소위 참여·공유 같은 SNS 중심의 웹 2.0 시대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 그전에 인터넷이 주로 수직적 연결을 강화했다면 지금은 수평적 연결을 강화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진 거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정보 공유, 데이터 오너십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법·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티즌들도 자정노력에 의해 발전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한다. 자정노력이 발전해서 스스로 완결된 모습을 갖출 때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은 참을성 있게 지

켜봐야 할 필요도 있다.

김정렬 정부도 인터넷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같은 캠페인을 민간과 함께 벌이고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겐 인터넷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동체나 학교, 가정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키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세상이 빨리 오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겠다.

최종원 김 과장 말씀에 덧붙이면 어려서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정부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서로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인터넷 활용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스마트 혁명에 대해 짚어보자. 2009년에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스마트 혁명 관련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스마트 혁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석권 인터넷 경제는 1세대 e-비즈니스 경제, 2세대 소셜 비즈니스 경제, 3세대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경제로 나눌 수 있다. 지금 페이스북이 소셜을 기치로 무려 시가총액 122조원(기업공개 시점 기준)에 해당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2세대를 끌고 가고 있으나, 3세대는 현재 잠복해 있는 것들이 부상하면서 끌고 갈 거다. 그렇다면 3세대를 끌고 갈 힘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것은 애

플이 플랫폼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고 본다. 애플이 만들어낸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지금 전체 산업지형을 바꾸고 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라는 것은 이용하기 편하다는 수준을 넘어 지능형 신사업이나 새로운 지식산업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 측면에서 이에 필요한 플랫폼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인텔리전트 서비스 분야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단 우리가 다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구글이, 애플이, 삼성전자와, LG와, 우리 통신사들과 협력해 한국에서 생산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한국이 벤치마크 대상, 레퍼런스 사이트가 되는 거다. 그런 전략을 구상하면 미래 3세대 인터넷 경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정렬 장 교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플랫폼 부분은 극히 취약하고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약하다. 최근 잘하고 있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면 ICT 토털 솔루션 기업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부족한 게 많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못할 거고, 못하면 연합하고 M&A도 하고 외국과 협력도 해야 된다. ICT와 관련된 것이 토털 솔루션으로 변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기업도 바뀌어야 하지만, 정부정책도 그런 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큰 틀에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실제로 정책들이 작동할 수 있고 효과도 볼 수 있다.

최종원 진정한 스마트 혁명이 되려면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앱도 개발돼야 하고 콘텐츠도 만들어져야 한다. 또 모바일 오피스와 같은 스마트 워크도 확산돼야 한다. 스마트 혁명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법·제도적 문제도 분명 생길 것이므로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처럼 스마트 격차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8.6%라고 하던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스마트폰을 보급할 건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장석권 스마트한 세상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린다거나 젊은 층에 쏠린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이 가정용 로봇을 부의 상징으로 사용하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게



운행 중인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즐기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

된다. 스마트의 기능도 똑같다. 스마트라고 하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 모습을 구상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현재 스마트 혁명은 B2C(Business to Consumer) 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개인적 차원의 스마트한 서비스가 대다수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 환경, 도로 등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스마트 혁명은 사회통합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김정렬 정부는 현재의 법·제도가 스마트 시대에 맞는 지, 지체가 일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클라우드니 빅 데이터니 모바일 광고니 계속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이다. 한 예로 방통위는 곧 '클라우드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접속해 빌려 쓰는 건데 기존의 법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가 확산되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 법과 제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주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원 이제까지 인터넷 30년의 성과와 함께 몇 가지 과제들을 살펴봤다. 더 나은 인터넷 세상이 되려면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도 있어야겠고 인터넷 윤리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 남을 배려하는 인터넷 활용 문화가 정착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도입되면서 스마트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인 측면도 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다.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 **한민**

●정리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독한 충고」

마디 그로시, 21세기북스



미국에서 심리학자, 경영 컨설턴트, 강연자로 활동 중인 마디 그로시(Mardy Grothe)가 책 「독한 충고」(원제 Neverisms)를 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절박하게 만류하거나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싶을 때 ‘절대’(never)라는 말을 쓴다. 저자는 지난 20년 동안 ‘절대’로 시작하는 명언들을 꾸준히 모으고 업데이트했다. 저자는 수백 수천 개의 ‘절대’ 명언들을 정치·경제·사회생활은 물론 우리 인생과 스포츠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관한 것들로 분류해 놓았다.

제1장은 ‘시든 화분이 있는 병원에 절대 가지 마라’가 제목이다. 화분을 시들게 할 정도라면 사람을 치료하는 수준은 안 봐도 뻔하다는 것이다. ‘절대 스테이크 나이프를 핏지 마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같은 충고도 보인다. 풀리처상을 받은 유머 칼럼니스트 데이브 배리의 말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하비 맥케이는 「하늘 위까지 편지를 보내라」(1998년)에서 여덟 살 시절을 떠올렸다. 계단 난간 위쪽에 앉아 있는데,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아버지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인생을 구해줄 수도 있는 교훈을 배우고 싶지 않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흥미를 느낀 어린 하비는 그러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난간을 미끄러져 내려오면 내가 받아 주마” 하고 말했다. 약간 미심쩍었던 하비는 물었다. “하지만 아빠가 정말 잡아 줄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내가 잡아 준다고 하지 않니” 안심한 하비는 난간을 타고 꼭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카펫이 깔린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하비가 일어서자 아버지가 말했다. “비즈니스

에선 절대 누구도 믿지 마라. 상대가 네 아버지라 해도 말이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야.”

뉴욕타임스의 전설적인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는 2005년 1월 14일 마지막 논평 칼럼을 썼다. 제목은 ‘절대 은퇴하지 마라’였다. 그의 나이 이미 75세였지만, 그는 ‘절대 은퇴하지 마시오. 뇌는 운동하지 않으면 위축되니까’라고 썼다. 이것은 노인학 전문가들이 쓴 「장수 전략: 머리와 몸을 통합시켜 100세까지 사는 방법」이라는 책 내용과 일치한다. ‘절대 은퇴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자면 절대, 절대, 절대 은퇴하지 마라. 직업을 바꾸든 무언가 전혀 다른 일을 하든 상관없지만, 은퇴만은 하지 마라.’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간 삶의 규칙을 인용하고 실천했다. 미국 8대 대통령 마틴 밴 뷰런은 은퇴 뒤 질문을 받았다. “정가에서 활동하는 동안 들었던 말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뷰런은 질문을 받자마자 대답했다. “아주 단순한 규칙이었소. 네 마디면 족하지요. ‘절대 편지를 쓰지 마라.’” 보스턴 출신 정치인 마틴 로머스니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수 있다면 절대 쓰지 말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절대 말하지 말며, 눈짓으로 충분하다면 절대 고개를 끄덕이지 마라.”

사랑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절대’ 명언도 많다. ‘사랑해’와 ‘너와 결혼하고 싶어’를 절대 혼동하지 마라, “남이 있는 곳에서 소리 지르는 남자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어떤 독자든지 책을 덮고 나면 스스로를 위한 ‘절대’ 명언을 만들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kikim@chosun.com
1985년 조선일보 기자, 1993~1999년 파리 특파원, 이후 문화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역임, 현 논설위원. 문학담당기자를 하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연재



학교 경제교육의 현주소는?

경제과목은 어렵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니 전략적으로라도 경제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 학교 경제교육의 현실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경제교육은 위기'라고들 말한다. 『나라경제』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교사, 학생, 교육과정 등 다각도로 짚어봤다.

“경제교육의 핵심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박병원 한국경제교육협회장

지난 5월 11일 이석재 KT 회장에 이어 제3대 한국경제교육협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하다. 사실 나는 1980년 경제기획원 산하에 설치된 ‘대국민경제홍보기획단’의 설립 멤버다. 당시 권오규 사무관(후일 경제부총리)과 같이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어찌보면 교육과 홍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이 이해하고 호응해 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국민들의 경제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에 적극 나섰던 기억이 있다. 지금 경제교육협회장이 되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

학교 경제교육을 비롯해 협회장께서 생각하는 경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국민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최선의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엔 그 팩트를 해석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경제의 기본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소양을 키워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경제교육에서 딱 한 가지만 가르쳐야 한다면 무엇을 꼽을 것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원리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각종 포퓰리즘 주장들이 커다란 이슈가 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이해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공짜는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이해하고 또 확신하고 있다면 무책임한 주의·주장들은 결코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맞장구를 치는 현실은 우리나라 경제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으면 ‘경제’가 왜 필요하겠나. 어느 국가나 최종 목적은 ‘온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무엇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효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경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목적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나.

첫째는 앞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공짜는 없다’이다. 그리고 둘째는 ‘정부는 무일푼’이

라는 점이다. 정부는 기업처럼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돈이 없다. 단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부 국민에게 돈을 걷어 다른 국민에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정부에 돈이 드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기실 정부가 아니라 다른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많은 이들이 정부가 공짜로 뭘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무상이 아니며 내가 아닌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국가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국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누적되게 되고 오래가면 국가가 파산할 수도 있다. 그리스를 보라.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쟁과 개방에 대한 경제교육도 중요하다고 보는 데...

물론이다. 개방과 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 원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번영은커녕 생존조차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주장한다. 개방 문제도 마찬가지다. 개방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은 실제로는 경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개방 및 국제화 추세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린 나라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 곳곳에서 개방과 경쟁을 기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대규모 유통점과 재래시장의 대립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경쟁으로부터 나를 지켜 달라는 주장은 경제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업자나 계층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려 한다면, 그땐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가. 그 때문에 소비자가 겪는 불편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을 도와 달라는 요구보다 남을 제한해 달라는 접근방식은 더 유해하다.

결국 경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남발하지 말아야 하고, 설령 그런 요구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모든 경제주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경제마인드를 키워 주는 것, 이것이 경제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말씀을 들어 보니 철두철미한 시장경제주의자다.

하하. 그런가. 사실 시장경제체제가 다른 체제에 비해 뛰어난 점이 많지만 폐해도 적지 않다. 시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시장의 약점과 허점도 시장주의자가 제일 잘 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시장경제라고 본다. 시장경제 이외에 충실하게 국부를 창출하고 정부의 역량을 더 키워 주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학교 등 경제교육을 위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경제교육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예로부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획경제 등 다양한 실험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런 다양한 실험 중에서 어떤 것이 성공했고, 어떤 것이 실패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자료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의 여러 주장들에 대해 애써 설득하기보다 '그 방법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도해 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포퓰리즘은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포퓰리즘의 실패 사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잘 발굴해 소개

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KD에서도 적극 나서겠으면 한다.

경제교과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다면 경제과목이 어려워 선택하지 않으니 수능시험을 더 쉽게 내야 하나? 개인적으로 안이한 발상이라고 본다. 오히려 기왕이면 다른 과목의 수준을 더 높이면 어떤가. 경제 문제를 쉽게 내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의 난이도도 높여 서로 수준을 맞추면 될 것이 아닌가. 시험문제를 쉽게 내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가? 시험문제를 쉽게 내니까 아이들의 공부는 낮은 수준에서 정지하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실수 안 하는 연습만으로 허비하게 만든다. 이것이 교육인가?

앞으로 경제교육협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 하나?

경제교육협회는 각 경제교육 수행기관을 코디네이트(coordinate)하고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경제교육이 너무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학교교육이 중요하지만, 그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으면 일반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육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경제교육은 아니다. 경제적 소양과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돼야 한다.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경제교육을 하는 것 외에 별도로 경제교육협회를 만들어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올해 협회의 사업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겠고, 내년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것이다. ■

●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현실과 동떨어진 학교 경제교육... 내용 어려워 학생들도 '외면'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경제적 굴곡이 클 때마다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 1970년대 말 오일쇼크의 굴곡을 겪고 1980년대 초 정부에 경제교육 전담 기구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2000년대 초에 민간 부문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엔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나 굴곡을 통해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그만큼 '경제 문맹'이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끼쳤음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금융(경제) 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21세기형 문맹이고, 문맹(illiteracy)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경제)교육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경제교육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화, 지식기반 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경제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했고, 영국은 2006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사업 추진과 5년간 청소년 등 1천만명 금융교육 실시를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도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해 경제교육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학교 경제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어렸을 적부터 경제교육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음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우선, 학교에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의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33시간경제를 배운다. 이 시간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사실상 최종 경제학습 시간인 셈이다. 고등학교 2, 3학년에 선택과목 '경제'를 배우지만 20%만이 '경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능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가장 많이 줄었다.

둘째, 교사들의 경제적 소양의 문제다. 경제교사 중 경제학을 전공한 비율은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 대학 시절 경제학과목을 2~3개 정도 수강하고 '경제'를 가르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경제교육의 연계성 미흡이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중학교까지 연계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시 분야가 앞으로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게다가 중학교 과정의 끝부분에 배정돼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아예 배우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경제 개념과 이론을 배우다 보니 학생들이 경제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게 됐다.

넷째, 학교 경제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경제교육이 이론과 원리, 수능 성적을 위한 것이 되다 보니 지식은 얻지만 지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줘야 할 '경제'가 배우기 까다롭고 익히기도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돼 학생들이 과목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현실 문제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야 한다. ■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jykim@kdi.re.kr



● 교육과정

부담 많아진 **중학교**, 경제교육 공동화 **우려되는 고등학교**

지난 3월 21일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경제교육과정의 특징은 크게 내용과 편제 면으로 나눠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내용 면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회소성과 경제적 선택과 같은 기초 경제개념이 보다 명시적 형태로 들어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선 각각 자산관리와 금융 관련 내용이 실생활과 연계된 경제내용으로 새로 도입됐다. 한편 편제 면에선 초등학교의 경우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교육과정이 기존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축소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의 경우 이전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목과 중학교 사회 교과목이 분담했던 경제교육과정이 중학교 사회 교과목에 집중됐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공통교육과정에 속했던 고등학교 사회과목이 경제와 함께 일반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생활경제 과목이 실용경제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다.

요컨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경제교육과정은 내용적 측면에서 자산 및 금융교육이 추가됨으로써 구체적인 경제생활과 연관된 주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편제적 측면에선 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까지로 축소되면서 경제교육과정이 중학교에 집중된 반면, 고등학교의



지난 4월 13일 경기 송원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광고로 배우는 창의적 경제수업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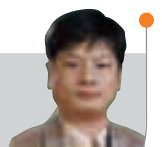
경우 어려운 수능 경제와 맞물려 가장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자칫하면 경제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해 학교 경제교육과정은 '생활과 괴리된 어려운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전히 이러한 비판이 유효할 수 있지만 실생활 사례 중심의 경제 교과서 내용 구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평가해온 노력에 힘입어 이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경제생활과 관련이 깊은 '자산관리'와 '금융교육' 내용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선택과목별 변별도 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너무 어려워진 수

능에서의 경제과목 난이도는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며, '쉬운 수능 경제'는 공동화 위기에 있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을 확대하는 데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해선 중학교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 내용 부담은 커졌는데 경제담당 교사의 준비도는 떨어지고, 새롭게 도입된 거시 및 국제경제 관련 내용을 과연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빠른 시간 내에 중학교 사회교사를 위한 맞춤형 경제연수와 이를 위한 적절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교과서 집필 과정에선 기초 경제개념과 미시경제 영역을 1학년 사회에서, 거시 및 국제경제는 3학년 사회의 앞부분에 나눠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경제교육이 지금까지 사회교과의 일반사회 영역으로, 또 사회탐구 중 일반사회 영역의 선택과목으로 머물러 있는 한 이 같은 방안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과목을 기존의 사회나 역사과목 수준으로 교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경모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kmmkim@gnu.kr



사범대에서 경제지식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은 2~3개에 그쳐

최근 학교 경제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해가 갈수록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고등학교에서 경제과목을 개설하는 학교 또한 매년 줄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교육과정도 개정될 때면 으레 경제 관련 과목의 축소나 폐지가 안건으로 오르곤 한다.

경제과목이 외면당하는 이유로 일선 경제 담당 교사들은 내용의 어려움, 경제 선택자의 수능에서의 불리함, 교사들의 경제과목 담당 기피 현상 등을 든다. 경제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탐구의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고, 수능에서 우수 등급을 얻기가 어려우며 교사들도 경제과목 지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여의도협회에서 열린 '하계 교원직무연수 중점강제교육' 행사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금융산업의 역할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교사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교사들이 경제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면 내용의 난제도 교사들의 경제과목 기피 현상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는 교사 양성 과정과 재교육 과정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교사양성 과정에서 경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경제지식을 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의 경우 11개 교육대 중에서 경제과목이 2학점 필수로 돼 있는 곳은 6개이고 나머지 5개 대학은 선택 과목이다. 고등학교 때 경제를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대학에서 주당 2시간씩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일선에서 경제를 지도하는 것이 무리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선택 과목으로 된 경우 학생들이 경제를 선택하지 않고 졸업한다면, 경제는 전혀 배워보지도 않고 교단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중·고등학교에서 경제는 대부분 일반사회 교사나 사회과 교사들이 가르친다. 사범대에서 이들의 경제 관련 과목 이수상황을 보면 경제를 가르치기 위한 배경지식을 쌓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내용이 난해하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사범대 사회교육과나 일반사회과의 경우 대학 4년 동안 3~5개의 경제과목을 배우며 그나마도 경제학 교재연구나 방법론을 빼면 경제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은 겨우 2~3개 과목뿐이다. 교사들이 일선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각 경제단체나 기관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 관련 연수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연수들은 거의 30~60시간 정도로 이뤄져 있으나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관기관의 성격에 따른 경제상식을 프로그램화하고 있어 경제담당 교사들이 경제지식을 체계화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체계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집중적으로 연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사들 중 소수라도 경제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경제교육에 앞장선다면,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김종호

서울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jnhkim1219@hanmail.net



● 학생

‘경제적인 사리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대학입시를 빼놓고 생각해보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제교육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원하는 경제교육은 어떤 것일까?

몇 년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학생들에게 ‘시험과 관계없이 현재 가장 알고 싶은 경제 문제는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

가장 압도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였다. 그 다음은 ‘어떤 직업이 좋은가’였다. 이 질문이 나오자 몇몇 학생들끼리 수군거렸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최고지...” 학생들의 질문이 뜬금없이 이번에는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너희들 수업시간에 이해 안 간다고 한 것들 있었잖아. 교과서 집필 교수님이 오셨으니 직접들 여쭙봐.”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썰렁했다. “벌써 다 잊어 버렸는데요.” “그런 건 재미없어요.”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과 관련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경제교육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얼핏 매우 타당한 얘기처럼 들린다. 그래서 다시 물어본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경제 공부가 무엇이냐고.” 대답이 궁해진 상대방이 말한다. “그건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경제교육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한된 경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먹어본 음식이라곤 자장면과 짬뽕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과정을 구성하거나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경제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economic literacy’로 요약된다. ‘literacy’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즉 문자 이해력을 말한다. 따라서 ‘economic literacy’는 인간 사회의 경제현상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경제적인 사리분별력’ 또는 ‘경제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올바른 사리분별력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가리켜 경제학에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분별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어떤 현상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따질 줄 아는 것이다. 무엇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롭고 해로운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편익이나 기회비용, 매몰비용, 가격 등은 여기에 필요한 기본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다. 철이 없는 아이는 자신 밖에 모르지만, 철이 든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이나 외부성, 공공재와 같은 경제개념들도 연관되겠지만, 그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바탕으로 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에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선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간의 경제교육 과정이 어떤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개정돼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사리분별력을 키우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오영수

경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ysoh@knu.ac.kr



“경제 교과서와 수능 난이도 비슷하게 맞춰야”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 교사로서 현재 학교경제 교육의 실태를 어떻게 진단하나?

교과서 수준에 비해 수능이 너무 어려운 게 문제다. 교과서는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준으로 가르치면 수능 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가 아닌 자체 제작 교재나 EBS 문제 풀이집 등을 수업시간에 주로 사용한다. 수능이 어려우면 교과서도 어렵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이수제까지 도입됐다. 매 학기당 과목을 8개로 한정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한 학기에 교과서 한 권을

다 배우는 것은 무리다. 또 고등학교의 국제경제 파트가 내년부터 중학교로 내려가면 내용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학생들이 경제에 흥미를 더욱 잃게 될까봐 우려스럽다.

수능을 배제한다면, 고등학생에게 경제과목을 꼭 가르칠 필요가 있나?

물론이다. 단순히 경제이론을 공부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개념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운다. 교육의 가장 본질적 가치인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다.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이 경제교사가 됐을 때다. 얼마 전 교생실습 때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운 경험이 없는 실습생이 경제를 가르치게 됐는데, 대학에서 배운 원론 수준 그대로 가르치더라. 반면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운 적이 있는 실습생들은 본인의 경험에 비춰 어떻게 설명해야 학생들의 이해가 빠를지를 금방 파악했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교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것은 교사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계열은 제외하더라도 사범대 혹은 경상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의 중요성

을 더욱 알릴 수 있을까?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사례를 통해 경제원리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자원은 한정돼 있는지, 합리적인 소비는 무엇인지 등 학생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데 경제관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직접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체험경제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체험사례와 학습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제동아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래 집단의 활동뿐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한 대학생 선배를 멘토로 연결시켰더니 학생들의 호응이 좋더라.

경제교사의 질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다. 교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경제교사는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할까?

교사의 질 문제가 교사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이 초임 교사 중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무조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교사가 경제이론을 잘 몰라서 어렵게 가르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학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제학적 지식이 높을수록 좋은 교사라고 한다면 경제학과 교수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이다. 경제라는 과목은 암기보다는 개념과 원리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학적 지식보다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교사의 교육학적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

●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 정책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전방위적 노력 확산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6~27일 이틀간 안산중소기업연수원에서 '경제교육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지역경제교육센터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경제교육제도 및 지원방안에 관한 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9년 2월 정부입법으로 「경제교육 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제4조1항),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되도록(제5조2항) 규정해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제8조)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제9조)를 지정해 경제교육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2년 5월 재지정했다. 한편 지방에도 균등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경제교육센터를 2009년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법제화해 2012년 현재 지역권역별로 11개 지역교육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법 제정을 계기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및 경제교육 관련 단체 합동으로 2010년 7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교육내용 현실화, 사회교사 전문성 강화, 상경계 입시의 경제 선택 확대, 수능 경제과목 난이도 적정수준 유지 등이 포함됐고, 경제단원을 학기 중간에 수업하도록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다. 이와 병행해 실생활 중심 경제교육을 추진할 것과 경제연구 학교, 금융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경제교육 여건은 아직까지 좋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과목 선택 학생 수나 수능 응시자 수를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의 척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관련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은 이런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추진을

계기로 9월에 기획재정부, 경제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학교경제교육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되는 '생활경제' 대체과목으로 '실용경제'를 신설하는 등 기존 경제 1과목에서 '사회' 및 '실용경제' 등 2과목을 신설해, 2009년 교육과정 개편 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2012년 3월에 실시했다. 또한 경제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을 현행 교육과정평가원에서 KDI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제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제교사 연수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교육협회 등을 중심으로 교사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과목이 2014년부터 모두 선택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경제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장, 교감의 연수 시 경제관련 연수를 명시하고 교원 양성 과정 및 직무연수 시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 향상 및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간 논의된 내용의 구체적 실행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필요시 2010년 7월 운영키로 했던 중앙부처·실·국장급협의회를 활성화해 합의된 내용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인옥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장
bangpa@most.go.kr



반시장으로 치우친 학교 경제교육 개선 시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어느 시민단체의 대학생회가 자체 홍보 팸플릿을 만들었다. 단체의 목표를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그대로 두고 유독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 경제라고 수식어를 첨가한 것을 봤다. 아마 학생들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미치자 쓴웃음이 나왔다.

대학 새내기들을 상대로 하는 경제학개론 시간에 주식시장은 개별기업들의 수익성과 장래 사업성을 평가함으로써 자금의 투자를 안내한다고 강의한 적이 있다. 수업이 끝난 뒤에 한 학생이 몹시 곤혹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주식시장을 대자본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착취의 수단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이 틀리냐는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9%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도 교육 담당 교사의 태반은 경제 전공이 아닌 지리나 역사 전공 출신이다.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과목이라면 사실 지리 전공교사가 다루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올바른 내용만 전달해주면 된다. 현실 사회가 극단적 이념 갈등



지난해 10월 1일 천안 북일고등학교 경제동아리 학생들이 모의 창업 게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등에 함몰된 만큼 학교 교사들의 상당수도 진보적 경제관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대자본의 착취수단이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경제제도와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민이라야 자신의 생활을 더 알차게 가꾼다. 경제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경제제도, 환경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가르쳐 시민적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기적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남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경제가 시장경제다. 이기적 개인이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이 책임을 잘 수행하면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자원을 배분하도록 개인의 이기적 생산활동을 이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현실 시장경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남을 해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현실 사례는 흔하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는 소홀한 감독을 틈타서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대형 금융 사고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황금만능주의에 젖은 시장경제의 탓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시장경제의 실패가 아니라 법치의 실패 때문이다. 프로축구에서 있었던 승부조작 사건이 축구의 실패가 아니라 축구계 기강의 실패인 것과 같다. 각종 경제범죄를 시장경제의 속성이라고 몰고 가는 경제교육은 승부조작이 축구의 본질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남을 해쳐서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치를 확실히 할 때 시장경쟁은 남들이 원하는 일을 더 싸게 더 잘해주려는 경쟁으로 나타난다.

현재 학교 경제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교사의 이념적 편향 때문인지 아니면 이해 부족 때문인지 교육 내용이 부당하게 반시장적으로 치우쳐 있는 점이다. 이념적 차이는 사회복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야 하는가에 대한 차이일 뿐으로서 학교 경제교육에서 친시장과 반시장에 대립할 까닭은 없다. 법치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명확히 구분해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교안을 마련하는 일이 학교 경제교육의 혼란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shoonlee@snu.ac.kr



섬진강에서 바이칼 호수를 보.았.다.

완연한 섬진강의 여름입니다. 이른 아침 나의 식솔인 강아지 ‘얼씨구’를 데리고 강변 산책을 했습니다. 물안개 막 피어오르는 강물 위로 납작한 조약돌을 골라 물수제비를 날려보았지요. 초초초 파문을 일으키며 물 위를 건너가는 조약돌은 끝내 강을 건너지 못하였지만, 튀는 물방울만큼이나 많은 물새들을 날아오르게 했으니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물새들에겐 미안했지만 꼬리를 치며 멍멍 짖어대는 얼씨구와 함께 오래도록 강 건너를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때 문득 강 건너에서도 물수제비를 뜨다가 이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나를 보았습니다. 피안과 차안이 뭐 그리 다르겠는지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절망만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첫 마음을 다져보는 것뿐이겠지요. 첫 마음, 초심이란 과거의 다짐이 아니라 만년설과 같고 물이나 불과 같고 바람과 흙과 같이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섬진강 물에 손을 담그니 아직은 차갑습니다. 몇 해 전 초여름에 녹색순례단으로 다녀온 바이칼 호수의 물이 어느새 섬진강으로 흘러든 것만 같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린 수심 1,600m의 청정한 물이 바로 내 앞에서 손을 내밀면 만져지는 섬진강 물로 흐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나의 상상력은 섬진강에서 바이칼 호수까지, 지리산에서 우랄산맥까지입니다. 내가 일생을 두고 깨쳐야 할 그 모든 것도 바로 이 공간 속에 있으며, 끝내 이루지 못할 시 창작도, 그 첫 마음도 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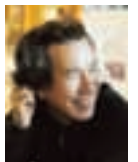
알려진 대로 바이칼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1,637m),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많은 담수량을 자랑하는 천혜의 호수입니다. 눈썹달을 닮은 이 거대한 호수는 우리나라의 영남지역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며, 이 호수로 유입되는 강은 336개나 되지만 바이칼 호수에서 빠져나가는 강은 양가라 강이 유일합니다.

알흔 섬의 부르칸 바위 앞에서 천고제를 올리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고국을 향해 솟대 하나를 세우는 일이었지요. 자작나무를 잘라 투박하게 만든 솟대를 세우고, 바이칼 호수의 차디찬 물에 들어가 세 번의 목욕재계를 했지요. 뼈마디가 저려 걸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 부들부들 몸서리를 쳤지만 정수리를 후려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바이칼에서 섬진강을 보았습니다. 우랄산맥의 만년설에서 겨울 지리산을 보고, 시베리아 자작나무 숲에서 구례평야나 평사리 들녘의 보리밭을 보고, 몽골 초원에서 말을 달리며 계절마다 모터사이클 전국일주를 하며 지나친 전국의 모든 국도와 마을들을 보았습니다.

바이칼 호수의 그 맑고 찬 물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보는 모든 물은 바이칼 호수의 물이 되었지요. 그리고 몽골 대평원과 시베리아의 거대한 숲을 보았으니 함부로 뽑아버린 잡초마저 내게는 거대한 초지이자 숲이 되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니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일만 남았으되 이마저 이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리하여 지리산과 섬진강의 여름은 덥지만 사실은 날마다 서늘할 뿐입니다. ■



이원규 시인

jirisanpoem@daum.net

1984년 『월간문학』, 1989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강물도 목이 마르다』, 『옛 애인의 집』 등 시집과

『멀리 나는 새는 집이 따로 없다』,

『지리산 편지』 등 산문집이 있다.

1940년 경기 평택 출생

고려대 법학과

1967년 행정고시 합격(5회)

1978년 ~1983년 체신부 경영개선담당관,

경영분석담당관, 계획·2과장

1988년 ~1990년 체신부 체신공무원교육원장,

전파관리국장, 체신금융국장

1991년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1994년 ~1996년 정보통신부 차관

1996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1997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

2002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2006년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

2012년 3월~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 국가에 봉사할 마지막 기회... 스마트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

지난 3월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셨으니 곧 취임 100일이다.

벌써 그렇게 되나. 참 빨리 갔네. 방송통신은 어느 분야보다 변화가 빠르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중요한 현안도 많다. 이런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 한다. 솔직히 취임 이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오늘 인터뷰 덕분에 100일이 되는 것도 알았다(웃음). 그동안 방송, 통신, 인터넷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나고 현장을 둘러보며 좋은 말씀을 들었다. 방송과 통신은 변화를 거듭하는 첨단 분야다. 현장과 정책의 괴리감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우선 통신설비제공 제도개선과 디지털전환 정책에 주력했다. 또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했고, 방송통신장관회의와 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와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려 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를 출범시켜 방송광고 판매 대행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틀을 마련한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안으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있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방통위의 주요 현안과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국민 홍보와 정부지원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니 내년이면 새로운 디지털방송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 생태계 환경에서 방송통신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나 덧붙이자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위원장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스마트 생태계’는 아직 일반 국민들에겐 생소한 개념이다. 스마트 생태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되나.

최근 스마트폰에서 시작돼 태블릿PC, 스마트TV로 이어지는 스마트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람은 물론 사물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과 시장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다. 과거엔 통신산업은 통신산업대로, 방송산업은 방송산업대로 개별 산업 내에서 경쟁해왔다. 하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콘텐츠·미디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산업이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콘텐츠즈(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와 기기(Device)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스마트 생태계다. 스마트 생태계 내에서는 모든 주체가 플랫폼화를 추구하면서 유례없이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전면적 경쟁이 전개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C-P-N-D’ 생태계가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구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창의성 있고 혁신

세계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와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창의적 생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스마트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적인 개인과 소집단을 육성하기 위해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ICT 선도기업의 높은 하드웨어 세계시장 점유율과 세계 최고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도 스마트 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당면 과제라 생각한다.

지난 1982년 5월 인터넷이 국내에 처음 연결된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이룬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90년대 PC통신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실현했고,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IT 벤처가 탄생하면서 인터넷 강국이 됐다. 이제 인터넷은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기·금융처럼 국가사회의 주요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시장 규모는 86조원으로 GDP 대비 인터넷 경제 비중은 세계 2위로 최상위권이다. 정부 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교통·의료 등과 접목돼 사회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도 증대됐다. 물론 과제도 많다. 인터넷은 현재 세계적으로 20억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10년 후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기회를 미래 인터넷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클라우드·사물통신 등과 같은 신산업을 키우려 한다. 또 해킹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와 같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를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한 ‘ICT 생태계 간 경쟁’,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스마트 시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변화해야 한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해킹·스팸 등으로 인한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해킹 등으로 인해 SK컴즈 3,500만명, 넥슨 1,320만명 등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스팸·명의로용·보이스피싱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했다. 이렇듯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2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으며, 8월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 개정 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뿐 아니라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 법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이 조성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공공 분야에서도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지난 4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했고 세부 이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통신비 인하는 어떻게 되고 있나?

방통위는 서민생활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이후 기본료 인하,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등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체 물가지수는 2007년 90.3에서 2012년 1분기에 105.9로 증가한 반면, 통신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02.6에서 95.9로 낮아지고, 2인 도시가구 기준 가계통신비 비중은 6.43%에서 5.64%로 감소했다. 한편 20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고가 스마트폰 확산과 통신서비스 이용 증가로 가계에서 지출하는 통신비가 증가한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확충과 LTE 등 신규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가입자당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투자 여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통신요금 개선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과 ICT산업 발전, 인프라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위적 요금인하보다는 경쟁을 통해 시장자율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통위는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를 활성화해 요금경쟁을 촉발시키고,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해 이통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제조사·마트 등으로 다양화해 휴대폰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중저가 스마트폰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됐다. 도입 목적은 무엇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해 희망하는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5월부터 개방형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다양한 단말기 유통망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통사가 유통한 단말기에만 적용하던 스마트폰 요금할인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앞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등 이용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단말기가 나올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사와 유통업체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포털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광고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의 운영사 카카오가 최근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트록을 출시한 것과 관련, 이통사들은 요금제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방통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방통위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장자율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업자가 mVoIP 허용 수준 등을 이용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mVoIP 서비스는 글로벌한 성격을 갖는 인터넷 서비스이므로 외국의 정책 동향도 매우 중요한데, 유럽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통사들이 mVoIP 확산에 대응해 요금제 조정을 신청할 경우 통신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 2010~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와이브로)사업자 허가심사를 추진했지만 신청법인의 주주구성 취약 및 재정적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허가대상법인은 선정되지 못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허가신청법인이 다시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인터뷰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통위는 올해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차질 없이 종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 DTV 보급 활성화와 함께 수신기 보조 등 정부지원을 본격 추진해 왔고, 그 결과 6월 초 현재 전체 TV보유가구 중 97.6%는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 디지털 방송 시청이 곤란한 42만8천여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부지원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말에 정부지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적시 지원이 어려워져 시청자 입장에서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방송사별로 자막고지방송을 매일 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정부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화면비율 100% 자막고지방송을 지역별로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 동안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등에서 디지털방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평소 좌우명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청유세심(淸流洗心)이란 말도. 일체유심조는 잘 알다시피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청유세심은 굳은 절개로 나쁜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다. 항상 바르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말들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불가에 이기방인(以己方人)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그러하니 남도 그러하리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요새 젊은이들 다른 사람 험담 많이 하지 않나. 이럴 때 이 말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를 돌아볼 때 자신이 없으면 그런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 보니 대개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들을 혈뜬더라.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본다.



지난 5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인터넷이 국내에 처음 연결된 1982년 5월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실수를 많이 하는 직원들에겐 어떻게 하시나?

불러서 눈물 나도록 따끔하게 야단치기 속으로 묵혀두지 않는다. 속으로 묵혀둔다는 것은 자기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싹이 노란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 예전 내게 야단 맞았던 사람들이 내가 공직에서 나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칭찬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더군.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맡겨진 소명을 다하려 한다. 취임 전 방통위가 계획하고 추진 중인 정책들을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ICT 경쟁력이 스마트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사실 지난 1996년 정보통신부 차관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지 15년 만에 정책현장에 돌아왔다. 개인적으로 지금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내외적으로 방송통신 분야는 산업 간 경계와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갈등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와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창의적 생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스마트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위원장인 나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원천기술과 미래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콘텐츠·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공익과 산업적 측면이 조화로운 방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힘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소통해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스마트 시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일
제가 할게요!



아무도 가 닿지 않은 바닷속처럼
끝없는 미지의 인터넷 항해~
수많은 언어들이 오고 가지만,
때로는 얼음처럼 냉정 하지만,
온기가 넘치는 따뜻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일,
제가 먼저 할게요.
가진 바다를 밝혀주는 소중한 등대처럼
예쁜 미소와 밝은 마음을 가진
바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의 고려합니다.

생(生)은 가능성의 덩어리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즈에서 아들 중빈이 차랑고(줄이 열 개인 안데스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다. 우리는 악기점에 들어가 레슨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삼십대 초반의 일본 남성, 히로를 만났다. 소박한 옷차림에 차분한 눈빛을 지닌 그는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다고 했다. 볼리비아에서 꽤 유명한 밴드인 모양이었다. 악기점 벽면에 히로가 커다랗게 웃고 있는 일간지가 붙어 있었다.

“이건 독립기념일 특별판에 나온 기사예요. 볼리비아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외국인 뮤지션으로 저를 다룬 거죠.”

화려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곳은 자그마한 악기점. 문화시장이 손바닥처럼 작은 볼리비아에서는 공연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뮤지션이라 해도 악기를 만들고 가게도 지키다가 밤이면 노래를 해야 하는 곳이다.

히로가 열 살 어린이의 작은 손에 맞을 법한 차랑고를 골랐다. 중빈이 뿌듯하게 가슴에 품더니, 레슨이 시작되기 전에 요청부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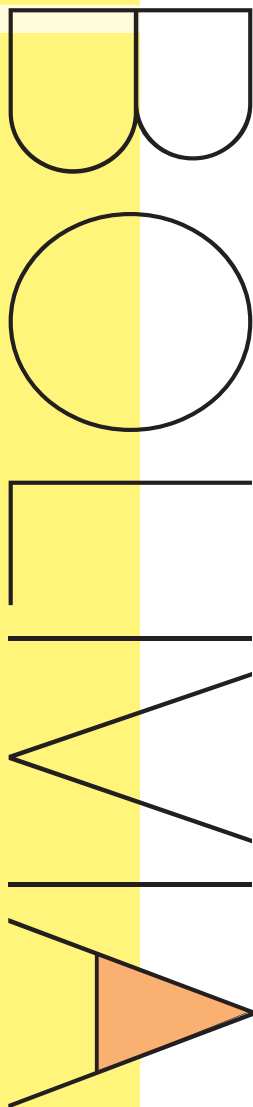
“히로 아저씨는 진짜 뮤지션이니까, 먼저 프로페셔널한 음악 좀 연주해주세요. 네? 네?”

히로가 미소를 짓더니 차랑고를 진지하게 잡았다. 서정적 멜로디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해지자, 가슴에 묘한 통증이 왔다. 스페인어 가사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점차 통증의 주파수가 Gripping인 걸 알겠다.

“이건 여자가 떠난 남자를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나는 히로를 다시 보았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다. 그러나 잠자던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는 가수는 많지 않다.

히로가 중빈에게 코드 세 개를 가르쳐준 뒤에 함께 라밤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프랑스 남자가 들어와 기타를 구경하다가, 조용히 기타 하나를 잡더니 라밤바를 따라 연주했다. 늦게까지 음악이





가게 입구에 서서 기타를 연주하는 청년

흘렀다. 프랑스 남자가 한 시간 남짓 기타를 연주하고 슬그머니 나가 버려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악기점에선 당연히 음악이 흐르는 것, 그것이 볼리비아식 사고였다.

중빈이 닳아버린 손톱을 보여준다.

“어려워요. 근데 재밌어요. 히로, 그거 아세요? 제 안엔 항상 음악이 있어요. 다른 걸 할 때 방해될 만큼. 언제나 저는 연주하고 있어요.”

헤어질 때, 히로는 중빈이 연습하려면 필요할 거라며 차랑고를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 두 남자는 안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친밀한 얼굴로 마주보더니 하하 웃었다.

어느 날 내가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히로, 어릴 적부터 노래를 했나요? 성악 공부 같은 거 말예요.”

“아뇨, 대학교에 입학해서 합창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진 한번도 노래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느 날 동아리 친구가 안데스 음악 CD를 가져왔는데, 듣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반해버리고 말았죠. 대학 졸업 후에도 난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안데스에 가서 이 음악을 배워야겠다. 졸업 후 일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미에 올 비행기값이 생길 만큼만요. 그리고 그 돈이 생기자, 비행기표를 사서 곧바로 볼리비아로 날아왔어요.”

“비행기표는 편도를 말하나요?”

“네, 편도요. 안데스 음악을 잘하게 될 때까지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히로는 볼리비아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는 일본인 스승을 만나 사했다. 매주 두 번씩 버스를 타고 왕복 8시간 거리를 달려가 배움을 계속했다. 음악을 배우는 동안 라파즈의 일본인 가정에서 묵었다. 하숙비 대신, 설거지나 요리가 그의 몫이었다. 그러저럭 삼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밴드 멤버도 만나게 됐고 저녁엔 악기점에서 일할 수도 있었다. 스승은 모든 기법과 감성을 히로에게 전수해 주었다. 어느새 10년이 됐다. 그는 지금 볼리비아에서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단 두 명의 외국인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라파즈 시내의 고급 아파트에 산다.

“네 명이 나누어 살고 있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하던 악기점도 제 소유가 됐죠. 제법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나는 히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크게 숨을 쉬었다. 여기, 한 사람이 생의 격렬했던 시절을 통째로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펼쳐진 생의 보따리가 불처럼 열정적이다. 앞뒤 재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 통째로 바쳐진 생.

때로 생은 불가능과 불합리의 바윗덩어리처럼 완고해 보이지만, 열정과 끈기라는 망치를 들고 질리게 덤벼들면 갈라지고 깨어지면서



01



02



03



04



01 라파즈의 인사동 '사가르나가' 거리를 배회하는 외국인 02 히로의 악기점 03 엄마의 가게 귀퉁이에서 숙제하는 소년, 글씨가 깜짝 놀랄 만큼 예뻐다. 04 차랑고의 키를 맞추는 히로와 중빈

가능함의 덩어리로 변모하기도 한다. 불합리와 불가능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면, 대개 열정도 끈기도 충분히 쏟아보지 못한 자의 뒷담화에 그칠 때가 많다. 그들은 생 안에 열정과 끈기 대신 계산기와 타임워치를 들여 놓았다. 그리고 경각을 닦으며 '작은 이익'을 쫓았다.

볼리비아를 떠나기 전날, 마지막 레슨이 있었다. 늘 그랬듯 그날도 히로의 레슨은 '합주'에 가까웠다. 그는 이 당치도 않은 실력의 꼬마를 언제나 동등한 뮤지션으로 대해 주었다. 그가 아이를 바라볼 때면, 자신의 스승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듯 잠깐 스쳐갈 뿐인 이 제자에게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지닌 것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연주를 시작하면, 히로는 귀로 듣지 않고 온몸을 기울여 들었다. 내내 정겹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엉성함이 나 실력 차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이가 틀릴 때마다 그의 뛰어난 솜씨가 그 구멍을 단단히 메웠고, 그러면 음악은 반드시 아름다워졌다. 아름다움으로 고무됨으로써 아이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얻는 가장 큰 배움은 태도가 아닐까. '배움을 사랑하는 태도.' 그는 이제 꽤 잘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래서 신나게 연주하고 있는 이 꼬마가 그 순간 음악을 즐기고 있다는 것, 넘치게 차랑고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듯 평화로이 눈을 감은 채 연주를 이끌곤 했다.

라파즈에서 중빈은 갈등하는 얼굴로 묻곤 했다.

"엄마, 여기서 차랑고를 더 배우며 오래 있을까?"

볼리비아를 떠나는 날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중빈이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수도, 라파즈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저것 좀 봐... 정말 아름답지?"

결국 어린아이도 알아가는 것이다. 존재의 아름다움은 그 안에 내재한 것들 때문이란 걸, 외적 아름다움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망가지거나, 망가지지 않더라도 보는 이를 질리게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슴속 마음 조각에 있다. 내 마음 한 조각을 누군가에게 떼어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머무는 그곳도 아름다운 곳이 된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박재



오소희 여행작가

endofpacific@naver.com

'사람' 여행가. 세상의 변방을 거닐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소통, 연대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저서로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겠지」, 「사랑바보」 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절묘한 선 긋기, 가능할까?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 일부를 체불했다가 하루 뒤에 지불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전철 건설로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된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의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고 판공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떠다가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된 지자체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스페인 재정위기의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스페인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적자 누적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신심성 공약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실질적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최근 급증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자체의 항변도 있다.

사업혜택이 지역에 국한되면 지자체가 부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파악하고, 위기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설사 겉보기에 지방재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보육이나 학교급식과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비용분담률에 대해 이견이 극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은 더욱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에 대한 교과서적인 기본 원칙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표

하는 정부가 그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재정대등성'(fiscal equivalence) 원칙이라 하며 이것이 완전하게 달성된 상태를 '완전일치'(perfect correspondence) 상태라 부른다. 이 원칙에 따르면 혜택이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금을 거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한다면 다른 지역이 얻게 되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사업의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이나 공공서비스마다 혜택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다르므로, 현재의 행정조직 및 구조를 벗어나 모든 사업에 대해 재정대등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정대등성 원칙의 기본 취지는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대등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지역 간 선호에 큰 차이가 있고 지방정부가 선호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면 이러한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 조달하고 지자체가 사업집행

한편 납세자의 이동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다른 지자체의 주민 역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를 주거지로 정할 것이다. 이 경우 각 지자체는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게 되며,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수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수준도 낮아진다. 이를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라 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율을



지난 6월 12일부터 서울간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해 논의됐다.

같이 만들고 보조금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지역 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비춰 생각하면, 일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은 그 편익이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정동등성 원칙에 의해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선 사업시행 여부 및 사업규모에 대한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도록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단기간에 가시적 업적을 내는데 몰두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이는 더욱 절실하다. 사실 이러한 심사에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 회인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한 정당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는 일이 흔한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기구나 중앙정부에 의한 적절한 감시와 심사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육이나 학교급식과 같은 사업에 대해선 역할분담이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가 지자체 주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복지사업은 가치재(merit goods;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통 중앙정부의 역할로 인식된다. 또한 앞에서 말한 납세자의 이동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납세

혜택이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한다면 다른 지역이 얻게 되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사업의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들이 지자체의 재정프로그램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려고 할 정도로 이동성이 높은가는 실증적으로 따져 봐야 할 문제이지만,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사업의 집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현재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논란이 있는 것은 지자체에 이양한 복지사업에 정부가 비용의 일정 비율만을 부담하는 데 따른 것인데, 지자체가 낭비적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원론적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적용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비용분담으로 인해 실질 가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돼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원 이양을 통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책임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는 단기간에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분권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광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kwanghokim@hanyang.ac.kr

이슬람금융 도입, 핵심은 무엇인가?

이슬람금융이란 전통적 금융방식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구성한 금융상품으로 일종의 대체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이슬람금융의 대표적 금융방식의 하나인 수쿠크(sukuk; 이슬람식 채권)를 통한 이슬람자금 유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종교계 등의 반대에 따라 실패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슬람금융의 정의, 무슬림(이슬람교도)권 및 비무슬림권 국가의 이슬람금융 도입 현황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자를 금지하는 율법에 따라 고안된 공동투자 방식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무슬림은 이자의 수취 등 전통적인 금융활동을 금지하는 종교적 행동양식에 따라 전통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다. 이슬람 율법(샤리아, shariah)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 신탁에 의한 이자의 수취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손실과 수익은 사업자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슬람금융이란 이러한 샤리아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모든 금융거래를 외형적으로 실행거래를 동반하고 이윤과 손실을 분배하는 공동투자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금융기법이다. 이슬람금융으로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슬람교도들도 자유롭게 투자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 이슬람금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의 이슬람법학자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shariah committee)로부터 합치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이슬람 금융상품은 일반대출, 할부금융, 보험(타카ful, takaful), 채권(수쿠크) 등 다양한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슬람금융의 발전은 1970년대 이후 중동지역의 석유수입 급증에 따라 금융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작했다. 당시 일부 무슬림 국가(파키스탄, 이란 등)들은 금융시스템 전체를 이슬람식으로 전환하기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전통적 금융기



지난 5월 22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관 내에 방화벽을 설치해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도 은행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슬람 원도 설치를 통한 중동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이슬람 금융시장이 크게 확장됐으며, 은행자산의 확대와 더불어 이슬람은행의 수익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상품의 수요 또한 확대됐다. 자본시장의 대표상품인 주식은 손익의 공동 부담이라는 샤리아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슬람식 대체상품의 개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샤리아에 따라 일부 투자대상 기업의 업종제한(도박, 술 등)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없이 무슬림권에서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수취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돼 이를 이슬람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쿠크란 이슬람식으로 채권을 재구성한 금융상품으로서 경제적 기능은 일반채권과 동일하나 샤리아 합치를 위한 구조로 변경하기 위해 실행자산 거래를 동반하는 금융상품이다.

수쿠크 잠재력 무궁무진... 각국 제도정비에 박차

수쿠크의 구조는 유동화시키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 구조인 무라바하 수쿠크의 경우 채권발행자는 보유한 자산을 금융기관에 판매



하고 이를 재구입하는 형태로 이때 발생하는 차익을 유통화시켜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수쿠크 소유자(채권투자자)는 이자 대신 자산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함께 기초자산에 대한 수혜적 소유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산 양도에 따른 이중과세 등이 일반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발행되는 수쿠크의 약 50%가 이러한 무라바하 거래 구조에 기초한 수쿠크다.

이슬람 금융상품 중 수쿠크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2000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행됐던 수쿠크는 최근 이슬람 금융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2011년 기준 발행액은 약 84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수쿠크 발행 총량의 54%를 담당하는 이슬람 금융시장의 거래허브로 발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까지도 수쿠크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쿠크 시장의 급성장은 비무슬림권 국가의 수쿠크 발행 및 유통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2005년 수쿠크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으며, 이슬람금융 도입에 보수적 입장을 보이던 프랑스 또한 2008년 수쿠크 발행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및 일본이 기본적인 수쿠크 발행 환경 정비를 완료했으며,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 허브로서의

수쿠크 시장의 급성장은 비무슬림권 국가의 수쿠크 발행 및 유통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2005년, 프랑스는 2008년 수쿠크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끝마쳤으며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및 일본이 기본적인 수쿠크 발행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싱가포르는 이슬람금융 허브로서의 도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일부 이슬람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도약을 위해 관련 제도정비와 더불어 일부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시장의 총자산은 2011년 말 기준 1조2천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금융 총자산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4분의 1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슬람 금융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전 세계 주요국의 발 빠른 이슬람금융 도입은 이러한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다. 소위 '장롱머니'라 불리는 이슬람권의 자금이 이슬람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점차 국제 금융시장으로 유입돼 주요 자금원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이를 대비한 제반 인프라 정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특히 중동에서의 건설, 플랜트 등 경제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현지 자금조달수요 또한 높기에 이슬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확대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슬람금융 특히 우선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수쿠크는 이미 주요국에서 일반채권에 준하는 대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품이다.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은 이슬람금융 도입을 통한 다양한 해외 자금조달원 확보 및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
hanskim@kcmi.re.kr

열매도 풍성, 잡초도 풍성한 7월

6월 하순이면 보통은 장마가 찾아온다. 장마가 찾아오는 초여름에는 비 때문에, 폭염이 쏟아지는 한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작물을 심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상반기 텃밭농사는 7월이면 거의 일단락되는 셈이다.

사람만큼 벌레도 좋아하는 싱싱한 열매채소

그렇다고 7월에 할 일이 없다는 건 결코 아니다. 심어놓은 텃밭 열매들을 따먹어야 할 때다. 풋고추, 토마토, 가지는 열매를 탐스럽게 달고, 오이와 호박은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열매를 키운다. 그야말로 텃밭은 열매로 무성해진다.

물 찬 오이는 그 자리에서 따먹으면 청량감이 그만이고, 막 탄 보랏빛 가지는 그냥 씹어 먹어도 될 만큼 아삭아삭 달다. 텃밭에서 키워먹는 열매채소는 운반되느라 며칠을 시달린 사먹는 열매채소와는 싱싱함과 맛에서 확연히 다르다.

단, 열매는 텃밭농부의 입맛에도 그만이지만, 벌레들에게도 맛이 일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텃밭에 자주 출현하는 놈들은 감자, 토마토, 가지와 채소 등을 좋아하는 28점무당벌레, 고추나 콩에 다닥다닥 달라붙는 노린재와 진딧물 등이다. 이 초식성 벌레들은 작물에게는 해충이다. 그러나 제 가족 입으로 들어갈 먹거리를 키우면서 농약을 뿌릴 수는 없는 법. 노린재나 28점무당벌레 등은 그릇을 받치고 훑어내리거나 물엿을 탄 물(1:1로 희석)을 뿌리는 것으로 처치하고, 진딧물은 우유나 마요네즈를 묽게 탄 희석액으로 포획한다. 여기에 더해 벌레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등판에 점이 7개인 칠성무당벌레는 육식성으로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이니 농부를 돕는 조력자인 셈.

풀이 자라는 속도는 작물의 두 배

벌레 못지않게 여름이 되면서 텃밭농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풀이다. 더위 지면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김매는 속도를 훨씬 앞지르기 때문이다. 버처럼 생긴 잡초는 대개 C4식물(벼는 C3식물인데 C3식물은 탄소가 3개인 탄수화물을, C4식물은 탄소가 4개인 탄수화물을 만든다)이다. 고온건조한 열대기후에 적합한 C4식물은 햇빛이나 이산화탄소가 같은 조건에서 온대성 작물인 C3식물보다 광합성 속도가 두 배나 빠르다. 그러니 무더운 여름이면 잡초가 금세 자라나기 마련. 풀을 제때 베거나 뽑지 않으면 곧 텃밭은 온통 수풀더미가 되고 만다.

이미 풀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 풀은 호미를 써도 잘 뽑히지 않는다. 이럴 때는 낮으로 베어 작물 주위로 덮어주는 것이 상책이다. 풀이 자라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씩 베어 텃밭을 덮어주면 햇빛을 가려 풀도 덜 나고, 발효도 마르지 않으며, 빗물에 흙과 거름이 쓸려나가는 것도 막는다. 단 9월 이후에는 풀에 풀씨가 많으므로 베어서 덮으면 나중에 풀이 너무 많이 나게 된다. 따라서 풀거름을 만드는 편이 낫다. 박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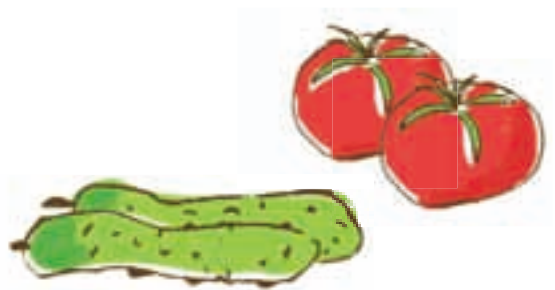


김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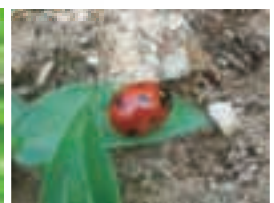
jesskim@naver.com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에서 펴내는 『텃밭신문』 편집장.

텃밭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오심견도 고치고 복잡한 머릿속도 많이 맑아졌다고 한다.



고추 줄기 즙을 빨아먹는 노린재



익충인 칠성무당벌레



풀을 베어 작물 주위로 덮어준 모습



해충인 28점무당벌레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 1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일반 노인가구에 비해 경제적·정서적·육체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순한 안전 확인을 넘어 소득과 일상생활 지원, 자살·치매·만성질환 관리 등에 나섰다. 지원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의 독거노인 정책은 어떤지, 그 밖에 개선점은 없는지 정책해설 PLUS에서 들여다봤다.



새 정책을 말한다

빈곤 독거노인에 일자리 우선 제공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734만가구 중 1인 가구는 414만가구로 24%를 차지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 가구형태였던 4인 가구 비중(22.5%)을 넘어선 것이다. 65세 이상의 1인 가구는 약 107만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 54만명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이고 2035년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별가구는 감소했으나 예비노인의 의식 변화 및 미혼·이혼 가구의 급증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문제점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체·인지기능이 약화된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은 다른 1인 가구보다 더 심각한 취약성을 보인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고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단절된 채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뿐 아니라 사망한 지 한참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발생의 위험마저 높다.

비단 안전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독거노인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절반가량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또 일상생활 수행에 곤란을 겪는 독거노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나 이 중 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약 30%에 불과하다. 이처럼 소득·건강·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1인 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정부 주도의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독거노인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독거노

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 특히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족 간 지원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5,485명)를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해 정부가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2012년 15만3천명)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심 필요 가구로 분류해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1 결연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지 한참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문제는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단절돼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유대관계 강화가 정부의 그 어



지난 3월 15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사업 공동발대식에서 노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직업의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있다.

〈그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개요



면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만한 갈등해소법,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가족’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농어촌의 독거노인들이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간 친목모임(일명 ‘독거노인 두레’)을 활성화해 상호 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자살·치매 예방 위한 집중관리시스템 마련

평균수명은 연장됐지만 자녀의 부양의식은 약화됨으로써 독거노인은 일반노인보다 훨씬 빈곤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해 소득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老-老)케어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서는 정서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자살·치매에 대한 조기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발굴·신고·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치매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는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 매뉴얼도 보급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40개 기업 등이 참여해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어 안부를 확인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종교계와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발맞춰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경제



임계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eklim@korea.kr

현장 인터뷰 1

“독거노인 마음 읽는 게 중요... 경제적·정서적 지원 동시에”

성미선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오랫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일해 오신 걸로 안다.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했을 텐데.

독거노인들의 여가생활, 정서적 지원에는 지역 노인 복지관의 역할이 크다.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하도록 가까이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독거노인 사업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노인복지관이 할 수 있다. 복지관에 나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양질의 식사를 하며 물리치료를 받거나 각종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가해 적으나마 소득을 얻기도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가 생긴다. 또 노인복지관은 국가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지자체나 사회단체와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 **현장에서 파악한 독거노인들의 요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경제적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 또 독거노인 중엔 집에서 대충 식사를 챙겨 드시거나 사먹는 분들이 많아 건강의 기본이 되는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다. 고독, 우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말씀하신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좋다. 잘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달라.

올해 개관 13년째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내실을 기해 왔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평가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유형별)을 수상했다. ‘실버캡’ 사업의 경우 지역 곳곳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마포경찰서·녹색어머니회·초등학교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고 참여 노인들 역시 사회적 역할로 책임감을 더 갖게 됐다. 이처럼 현재 일자리 사업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참여와 소득을 함께 가져가는 것, 즉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다. **독거노인 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은 2008~2011년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이었으나, 2012년 자치구에서 독거노인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으로 별도 센터를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우리 복지관은 돌봄기본서비스가 아니라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이나 민간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인 ‘별별마을’은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마을 단위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노인돌봄기본사업에서 노인돌봄미가 안전망이 돼 준다면, 별별마을은 동 단위로 독거노인들을 묶어 활동가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형태다.

최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제언할 내용이 있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양적으로만 집중된다는 느낌이다. 독거노인 수 자체가 늘었으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질적으로도 담보돼야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또 장기운영 사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지속적 배치를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말씀 해 달라.

복지관 경영자에게선 수요를 계속 읽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틈새나 사각지대가 새로운 복지수요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신명희



“살아생전 그렇게 **좋은 세상** 처음 봤소”

김봉애 '어르신 세상나들이' 참가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사업이다. 거기에 더해 올해는 라이나생명과 함께 '어르신 세상나들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독거노인들이 개인별 또는 각 지역별 복지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매달 일정 인원을 선정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여행을 보내주고 제반 비용도 제공해준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4월 여행을 다녀온 김봉애 할머니(73세)를 해당 노인복지관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났다.

“살아생전 그런 곳에 처음 가봤소.”

여행 소감에 대한 김 할머니의 첫 대답은 인터뷰 내내 계속됐다. 장시간 여행이 힘들시진 않았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불편한 점도 없었고 그저 좋았다는 할머니.

이번 사업을 통해 김 할머니가 다녀온 곳은 강원도 동해다. 가는 길에 봉평마을도 들르고 정동진, 낙산사, 주문진 등을 1박 2일 동안 여행했다고 한다. 같은 복지관의 노인돌보미 이수연 씨(53세)와 라이나생명 측 봉사자들까지 동행해 여행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배를 탔는데 배 안에서 영화 같은 것도 보고 경치도 구경했지. 산으로 어디로 다녔는데 지금은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구경한 건 생생해. 차를 타고 빙빙 돌았더니 맨 처음 우리가 간 데가 강남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강원도라. 살아생전 처음으로 강원도에 가봤어. 말만 들었지. 거기가 그렇게 산골인지 몰랐더니깐. 음식도 어찌나 맛나던지. 잘 먹고 잠도 편히 잤어.”

할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가 옆에 있던 이수연 씨의 손을 잡고 칭찬에 입이 마른다. “나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오리지널로만 뽑아왔더라니까. 어찌나 잘해줬는지 몰라. 나이도 먹고 여행도 안 해봐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선생님이 척척 알아서 다 해줘. 뭐 힘들 일이 없었지.”

이수연 씨는 “어르신이 참 긍정적인 분이라 지친 기색 없이 뭐든 잘 드시고 즐거워하셨다”며 그 모습을 보니 이번 사업의 의미를 잘 알겠다고 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오길 꺼리는 편이라 그나마 돌보미들이 찾아뵙지 않으면 아예 바깥출입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가보고 싶은 곳은 없냐는 기자의 우문에 김 할머니의 현답이 기가 막히다.

“어딜 가봐야 어디가 좋은 줄 아는데, 내가 뭘 알아야 가지. 이제 나한테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거야.”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한다는 김 할머니. 동네 친구들이랑 밥도 해먹고 화투 치는 재미로 산다 한다. 더위 조심하시라는 인사에 “더운 거 요까지 거는 문제도 아녀”라며 손을 흔들며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겨웠다.

“내가 벌어먹고 사느라 이 넓은 세상에 간혀서만 살았지. 그나마 여기 복지관 와서 놀러도 가고 구경도 하고 그랬네. 우리나라도 참 징그럽게 좋습디다. 더 말할 것도 없어!” 김안 기자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 어르신 세상나들이 사업 문의(올해 11월까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070-7117-1633, <http://1661-2129.or.kr>)

해외사례_일본

“주먹밥이 먹고 싶다” 굶어 죽는 일본인들

고독사(孤獨死). 일본에선 이제 고유명사처럼 익숙해진 단어다. 그 배경은 ‘무연사회’(無縁社會), 최대 이유는 빈곤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2010년을 계기로 무연사회가 중대 이슈로 부각됐다. 생계형 범죄부터 아사·자살이라는 충격적 사건·사고의 배경에 ‘빈곤·고독’이 있음이 확인됐다. 무연사회의 최대 희생자는 노인인구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고령자가 대다수다. 성장수혜를 고스란히 받아 썩짓돈이 많을 것이라 부자노인 이미지와 겹맞잡게 상대고독과 절대빈곤에 방치된 하류노인이 적잖게 드러났다. 임종 없이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대부분 사망 후 한참이 지난 뒤에야 발견된다. 이런 고독사는 연간 3만2천명(2010년)에 달한다.

독거노인은 고령사회의 시한폭탄이다. 빈곤과 고독의 악순환이 필연적으로 독거양산과 맞물려서다. 더 우려되는 건 현역세대의 독거인구다. 만혼(晩婚)·비혼(非婚)이 심화되면서 가족형성 포기·실패자가 급증세다. 1980년 20%에 불과하던 독거세대는 지금 30%(1,500만 호)를 넘어섰다. 3가구 중 1가구가 ‘나홀로’다. 2030년이면 40%까지 치솟는다.

일본의 복지시스템은 흔들리는 중이다. 격차심화로 복지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복지모델의 재구축에 실패했다는 혹평을 피하기 힘들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근로능력이 없어 정부복지가 필수인데 그간 일본모델은 정부복지가 빈약했다. 대신 기업에 복지를 위탁했다. 바로 ‘중업원복지주의’다. 남성전업·여성가사의 고용구조를 전제로 샐러리맨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수요(주택·의료·노후)를 기업이 해결해줬다. 나머지 지방산

업·농촌지역은 정부재정(공공건설)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제는 적자생존·승자독식이 지배하면서 1%에서 탈락한 99%의 복지수요가 급증한 점이다. 그 상징이 중년 이상의 독거노인이다. 이들을 품으라고 정부복지가 마련됐지만 설계가 부실하고 재정압박이 부담스러워 기능부전에 빠졌다. 2007년 “주먹밥이 먹고 싶다”며 굶어 죽은 중년남성이 발견된 이래 여전히 유사사건은 반복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여론몰대로 일본 정부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일단 증세 관철로 재정부호에 나섰다. 장기특효약이다. 생활보호제도의 창구지도로 복지재원 전달시스템에도 손을 댔다. 필요수급자에게 돈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로능력과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일자리 제공도 필요하다. 정년연장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독거노인의 건강하고 밝은 노후를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고독과의 단절장치 마련을 위해 일부 NPO(비영리단체)는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을 노인세대 자체에서 해결하는 자생모델까지 선뎠다. 가족유지를 위한 인연부활은 여론·교육이 맡는다.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로 독거노인 대량양산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둘러 나서야 저비용·고효율의 독거노인 복지강화 숙제를 풀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일본학과 겸임교수
change4dream@naver.com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수

우리 세대 노인은 비동시적 사회현상을 동시에 경험했다. 전근대적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보릿고개와 전쟁을 겪고, 근대적 산업사회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가족부양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후 탈근대적 정보사회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형태 또한 전적인 가족동거부양 형태에서 동거와 별거부양이 혼재하던 형태를 거쳐 이제는 별거부양이 보편화돼 가는 양상이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노인의 노년기 진입으로 독거노인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은 빈곤과 질병 등 노년기의 4고(四苦)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족의 부양기능이 취약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시장의 힘으로는 복지욕구의 충족과 생활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피해갈 수 없는 핵심적 국가정책과제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그 의미와 시의성이 높다. 먼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종합적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집단을 구분하고, 가족-민간-공공 부문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한 다층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혈연가족과의 유대강화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족'을 구성해 손상된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를 복원하려는 것도 적절한 시도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단계별 종합서비스체계를 갖춘 점도 눈에 띈다. 즉, 독거생활 시작단계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생활문제 발생을 1차 예방하고, 독거생활 안정화단계에서는 일차

리, 돌봄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건강관리를 통해 문제의 심화를 2차 예방하며, 자살과 치매위험군 등에 대한 개입과 장례서비스 등을 통해 3차 예방하는 생활단계별 보호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마을단위 공동생활가정과 두레모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나 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재정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확보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종합적 서비스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비스 전달체계는 최종단계에서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뉘므로 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 관리체계의 구축은 필수다.

셋째, 공적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속적 처우 개선과 기본 사업비의 편성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마련돼도 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처우가 열악하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활교육과 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업비의 편성은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kjd716@mokwon.ac.kr



Honolulu Museum of Art



Brooklyn Museum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Museum of Fine Arts,
Boston



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

Philadelphia Museum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Cleveland Museum of Art



Harvard Art Museums
Arthur M. Sackler Museum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KOREA
FOUNDATION

협찬
KOREAN AIR

미국, Korean Art from the United States 한국미술을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2012
06.05 ^{tue}
08.05 ^{sun}

경 제 정 책 해 설

- 64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중동'을 품다
제2의 중동 붐을 활용한 중동진출 활성화 방안
지식경제부
- 66 최고의 숙련기술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2012~2016년)
고용노동부
- 69 연구현장 자율성 대폭 확대... '성실실패제도' 도입
국가 R&D 연구관리제도 개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71 물산업 해외진출 2017년 50억달러로 확대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녹색성장위원회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중동'을 품다

제2의 중동 붐을 활용한 중동진출 활성화 방안

◎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간혹 숫자만큼 객관적으로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도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1, 국무총리 1, 지식경제부 장관 3, 국토해양부 장관 2, 보건복지부 장관 1... 올해 들어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최고위 정부 인사들이 중동을 방문한 횟수이자 나날이 커지고 있는 대중동 협력의 중요성을 방증해 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중동, 오일머니 기반으로

5% 이상의 고성장 지속

낮선 종교와 문화 탓인지 우리에게 '중동'은 여전히 생소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나라와 중동은 이미 1천여년 전부터 실크로드와 바닷길을 통해 교류를 이어왔다. 고려의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드나들던 아랍 상인들에 의해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로 퍼져나간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1970~1980년대의 중동은 한국에 '기회의 땅'이었다. 이른바 '중동 붐'의 시기, 한국 기업이 중동 인프라 건설에 성실하고 완성도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외화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나라가 지금의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이 됐다. 40년 전 1억6천만달러에 불과했던 한국과 중동 간 교역규모는 이제 1천억 달러 수준으로 600배가 넘게 확대됐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게 되면서 대중동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사람들은 '두 번째 중동 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흔히 낙타와 모래바람을 상상하며 중동을 방문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최신 디자인의 고층빌딩들로 마천루를 이룬 '중동' 그 자체일 것이다.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지역이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은 계속되는 고유가로 축적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동은 1조7천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부펀드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지난해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 전역으로 번진 '자스민 혁명'은 중동국가들로 하여금 대규모 사회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막대한 규모의 플랜트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예컨대 사우디는 자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100여개의 종합병원과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도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최소 700억달러의 SOC와 플랜트 건설 계획으로 분주하다. 또한 중동 각국은 언젠가 고갈돼 버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의 산업 다변화에 적극 나서며 다가올 'Post-Oil' 시대에 대한 준비에도 적극적이다. 이들 중동 국가들에게, 전쟁의 폐허에서 단기간에 강력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산업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고의 롤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오일머니로 축적된 막대한 국부, 자스민 혁명에 따른 대규모 사회복지 인프라 수요, 산업다변화를 향한 욕구 등 변모하고 있는 중동의 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대중동협력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지난 5월 이러한 국민의 산물로 정부는 '제2의 중동 붐을 활용한

중동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호텔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하는 'K-플라자' 설치

제2의 중동 붐은 1970년대의 1차 중동 붐과는 많이 다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동의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한 달라졌고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제1차 중동 붐이 토목·건설 중심의 제한된 분야에서 노동력 제공 위주의 협력이었다면, 제2의 중동 붐은 에너지·IT·의료·금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의 기술력과 우수 인력을 활용하는 협력의 기회다.

정부는 먼저 중동과의 전통적 협력 분야라 할 수 있는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산유국들과 정부 차원의 에너지 협력채널을 완비하고, 민간 차원의 협력강화를 위해 수시로 에너지 수급협약이 가능한 민간 에너지협약체제를 구성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유가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다양화하는 한편, 플

랜트 경쟁력 강화를 통해 SOC 수주와 더불어 IPP(Independent Power Plant, 민자발전), 관광, 담수화 설비, 디지털병원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수주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30대 품목의 R&D를 지원하는 내용의 플랜트 기자재 육성 대책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수주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입찰의 폐해를 방지하고 수주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ICT·의료·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진출을 도모하고, 우수한 한국의 기술력과 풍부한 중동의 자금력이 결합해 미래 지향적인 산업과 기술에 투자·협력하는 방안도 가시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중동진출지원센터를 마련하고, K-플라자 설치와 중동 종합포털 구축도 추진한다. 중동에 설치될 K-플라자가 우리 기업에 호텔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동 종합포털은 현재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에 산재돼 있는 중동정보를 통합해 기업과 구인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이버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한-중동 GCC 경험포럼의 상설화도 유망 비즈니스 기회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우리는 세계 아홉번째로 무역 1조달러의 위업을 이뤄냈고, 이제 2조달러 달성을 위한 다음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무역 2조달러의 실마리를 중동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동진출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0년 중동 수출액은 1,020억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원전과 플랜트 등 주요 분야에서 진출인력도 현재의 1만6천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하고 500만달러 이상 수출 중소·중견기업도 390개에서 936개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중동진출 방안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기업인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사람들은 중동을 두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라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지금 그 중동이 미래 협력의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

● 조웅환 지식경제부 중동아프리카협력과장
woong2@mke.go.kr



지난 5월 2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관에서 중동 최초의 대규모 한국상품전시회인 '2012 아부다비 한국상품전'(MIK 2012)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중소기업 68개사를 비롯해 대기업과 공기업 등 102개사가 참가했다.

최고의 숙련기술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2012~2016년)



◎ 지난 5월 29일 정부는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숙련기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현장기술 발전 등 숙련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2010년 전면 개정된 「숙련기술장려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고 산업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근로자는 현장의 기술을 체화한 '숙련기술인력'으로 전환됐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2009년 16.7%에서 2012년 38.1%(교육과학기술부, 매년 4월 1일 기준)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인식이 학력이나 학벌보다 숙련기술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된 것이다. 대학진학률도 2008년 83.8%에서 2011년 72.3%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열린 고용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력과 학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부족

해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의 46.2%가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번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사회 흐름을 보다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성공요소인 숙련기술인력을 정부·기업·학교가 나서서 키워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

학력보다 실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려면 우선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숙련기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제도를 정비, '예비대한민국명장'(현 우수숙련기술자) 중에서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해 숙련기술인에게 성공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 단계씩 기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력과 학벌의 벽을 넘

어 실력과 기술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숙련기술인의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매년 치러지는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국제 기능올림픽 출전을 위한 관문으로만 여겨져 소수 엘리트 학생들만 참여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능 나누기의 마당을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수한 선수 중심이 아니라 기능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하나의 팀을 이뤄 팀별로 기능경기대회 과제를 같이 풀거나, 기업·학교에서 함께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거나, 지역별로 특화된 직종을 개발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동체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특히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해 우수숙련기술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일반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들의 숙련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해 우수숙련기술인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숙련기술인의 메카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우수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 현장교수단'과 진로코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등에게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기술과 숙련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숙련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학력만으로 단일화된 역량평가의 한계를 극복,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종별 직무역량을 발굴·평가하는 '핵심직무역량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해 기업이 학력이나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숙련기술인력이 기업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

킴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종별 '숙련형성경로모형'을 개발·보급해 숙련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승진, 보상의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으로

능력중심문화 확산할 것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확산된다고 해도,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안정된 구조가 이뤄져야 학교-기업-사회를 연계하는 지속적 숙련기술인력 양성의 선순환구조가 완성된다. 산업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통해 현장기술을 체화한 고숙련 근로자를 사내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기법을 지도하고, 기업 내 학습조직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 기업 내 훈련을 강화해 숙련기술 전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학과 훈련비를 지원하고 대입재직자 특별전형 및 기업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한 우수숙련기술인들을 '대한민국 산업 현장교수단'으로 구성, 특성화고와 대학 등에서 숙련기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중합 HRD(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숙련기술을 체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고 특성화고 교사의 산업현장 직무교육을 활성화시켜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숙련기술장려정책이 탄탄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숙련인력 수요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기술인의 기술수준과 경력 등의 정보를 축적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조선산업 마이스터고인 경남 거제시 거제공고에서 한 학생이 용접 실습을 하고 있다.

며 우수숙련기술인들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은 학력과 학벌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중요시되는 열린고용사회의 비전을 열어가는 종합계획이다. 기존의 단편적으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던 정책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최고경쟁력인 숙련기술 혁신을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계획인 것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열린 고용사회가 한 발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본다. ■

● 송민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praxis1@moel.go.kr



김영모 대한민국 명장회 회장

“기능인 처우 개선, 크게 환영할 일... 고령기능인 활용 고민해주길”

우리나라는 한 분야에서 25년 이상 종사한 최고 기술인에게 ‘명장’(名匠)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그들만의 남다른 가치를 인정해 왔다. ‘대한민국 명장회’는 이처럼 명장으로 선정된 이들이 모여 기능인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공예·산업·서비스산업 분야 170여 개 직종에서 명장을 선정했는데 최근 발표된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에 의해 선정기준 변화, 직종의 통폐합 등을 겪게 됐다. 김영모 대한민국 명장회 회장(60세, 제과명장)에게 그 내용을 들어봤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 계획, 어떻게 보나?

기능인을 제대로 인정해주려는 정책개발과 관심에 기능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명장을 최고의 숙련기술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덕분에 회원들은 물론 기능인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그만큼 명장을 엄격하게 선정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번 계획에 의해 달라진 점은?

이전엔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때도 심사기준은 매우 엄격했지만, 앞으로는 우수숙련기술자를 먼저 선발하고 7년간 기술개발과 사회기여 노력 등을 고루 살펴본 후에야 명장 신청자격이 준다.

그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장 증서를 수여했는데 대통령 수여로 바뀐 점도 있다.

그럼 명장이 되기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최고의 기능인은 기능만 최고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명장이라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의 제조기술, 뿌리기술이 후배 기능인들에게 전수돼야 하이테크 고난도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난 대한민국 명장을 ‘국보급 기술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있기에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기능인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이공계를 기피하게 된 것 아닌가. 어렵게 선정된 만큼 사회적 처우가 좋아지면 된다.

대한민국 명장은 어떻게 선정되나. 기준은?

그 분야 최고인가, 명장으로서 합당한 기술력을 갖췄는가가 우선이다. 보유한 특허, 작성한 논문 수 등 후진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객관적 자료를 살펴본다. 그 다음엔 인격적 소양을 평가한다. 평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사회에 기여해 왔는가를 평가한다. 심사는 학계와 업계, 우리 명장회가 함께 실시한다.

우리 사회의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기능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런

데 부모들, 기성세대가 문제다. 자식들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기술을 배우려고 온 애를 부모가 끌고 간다. 기성세대의 의식을 바꾸려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인식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 최근 고졸취업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이 4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뒤 대졸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현재의 학력, 스펙쌓기의 폐단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번 계획에 포함된 홍보방안을 잘 추진해줬으면 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능인들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봐 달라. 60세 정년퇴직할 시점이면 기술인은 한창 기능에 꽃이 필 때다. 이들의 최고기술을 그대로 썩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또 수십년 동안 최고의 기술을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명장들에게 나이가 들었으니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은 기능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잘 전수돼야 후배 기술인들도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표초희 나라경제기자

연구현장 자율성 대폭 확대… ‘성실실패제도’ 도입

국가 R&D 연구관리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82년도이다. 당시 과학기술처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마련했고, 이를 모태로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업발전과 수출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따라 응용 및 개발 연구가 주를 이뤘다. 국가연구개발투자는 경제 전반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를 선도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핵심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 지난해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출범한 이후 4개월에 걸쳐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연구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복잡한 연구비 사용기준, 서류작성 등 연구 외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는 등 연구에 몰두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부처마다 다른 연구규정 ‘표준화·간소화’

이에 국과위는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자 중심의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부처별로 불합리하게 달리 적용하던 기준을 표준화하고 간소

화하며,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연구현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회의비 및 연구원 식대와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기준들 대신 원칙적으로는 허용되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도입해 단순화했다. 즉 회의비의 경우에는 내부품의서와 같은 사전 원인행위가 없거나 회의록이 없는 경우에만 부당집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연구원 식대의 경우에도 평일 점심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는 그랜트(Grant, 미국의 연구비 지원방식)를 도입했다. 즉 기초

〈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시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수준

현행	개정
•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한 경우: 3~5년 • 의도적으로 부정집행한 경우: 2~3년 •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해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 초과: 5년 이내 •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30%: 4년 이내 •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 이하: 3년 이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지난 6월 5일 서울 한양대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다년도 연구과제인 경우 연구비를 이월해 사용하더라도 제한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는 그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 목표했던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단한 과학적 발명들도 수많은 실패를 거쳐 탄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의 성실성은 감안하지 않고 목표했던 결과를 도출했느냐의 여부만으로 평가해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 부정적 효과는 자명하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래서 어려운 연구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 줄곧 제기돼 왔던 '성실실패제도'를 제도화했다. 즉 처음 목표로 세웠던 연구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듯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 R&D 사업비는 연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돼야지 다른 목적에 사용돼서도, 방만하게 사용돼서도 안 된다. 최근 들어 감사원이나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연구비의 방만한 집행 및 횡령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량 연구자에게만 국한된 사항이며, 이들로 인해 전체 과학기술계가 부정된 집단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비 횡령과 같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지금은 횡령, 유용, 의도적 부정집행 등 사유별로 제재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유를 적용해야 할지 구분이 어려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수준의 제재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별로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누적 시 R&D 사업 참여 영구 제한

이올러 향후에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연구비 부정사용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고 5년까지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고,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재처분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과 같은 중대한 잘못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과학기술기본법」 개

정안을 마련해 이러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기술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수행과제수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수를 최대 5개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연구자일수록 연구비 규모가 큰 연구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연구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연구에는 우수한 연구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연구에 대해서는 과제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해 우수 연구자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에는 오랫동안 연구 현장에서 논의돼 왔으나 제도화되지 못했던 획기적인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렇다 해도 연구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국과위는 연구현장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연구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박구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장
parkus@nsc.go.kr

물산업 해외진출 2017년 50억달러로 확대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물공급 확보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물부족(연간 1인당 물사용량이 1천ℓ가 되지 않는 수준) 인구가 2007년 10억명에서 2025년경이면 30억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OECD 미래전망보고서는 한국의 경우도 현재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국가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각국은 물시장을 '블루 골드'(Blue Gold) 시장이라 부르며 물산업 육성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성장 동력 5대 실천과제의 하나로 고도 물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물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천억달러 규모로 반도체(2,800억달러), 조선(2,500억달러) 시장보다도 2배 이상 큰 시장이며 2025년이면 8,65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물시장에서 우리 기업 점유율 0.4%

물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과 함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래산업이자 성장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년 7월)에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과제를 담았으며, 2010년 10월에는 '물,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물산업 육성전략', '기후변화 대비 미래수자원 전략',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 등을 보

고했다. 그동안 원천기술 개발, 상하수도 통합·광역화, 물분야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4대강 사업은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의 우수 사례로 OECD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태국, 중국, 알제리 등 여러 나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

세계 물시장은 베올리아(Veolia, 프랑스), 수에즈(Suez, 프랑스), 아그바(Agbar, 스페인), 알베에(RWE, 독일), GE(미국) 등 세계적 규모의 주요 전문 물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2009년 기준으로 베올리아사와 수에

〈표〉 물산업 육성 주요 성과(∼2012)

부문	주요 내용	평가
원천기술 개발	세계 4번째 분리막(침지/가압식) 기술개발	영등포정수장 적용
	세계 3번째 역삼투압 해수담수 기술개발	미국, 호주 등 수출
육성기반 구축	물 재이용 분야 법률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20억톤(2020년) 수자원 확보
	상하수도 분야 광역화 및 민간기업 참여	토털솔루션 역량 강화
	물산업 통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업활동 자료 제공
해외진출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물시장 진출 확대	35개국 정부와 MOU
	물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투자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0년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 쇼아이바의 해수담수화플랜트 전경

조사, 두 기업의 서비스 인구는 약 2억3천만 명으로 민영화된 물시장의 약 29%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계 기업이 고도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역내 물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해수담수화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댐, 상하수도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업 진출규모는 약 14억2천억달러(2011년 기준)로 세계 물시장의 0.4%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상하수도 및 해수담수화 설비 위주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도 물처리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 IT와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분야의 개척,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물산업도 분야별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물산업 분야 각 부문에 걸쳐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물 전문기업의 육성과 물산업 분야

의 생태계 조성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공공·민간 등 주요 파트너별 협력을 통해 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해외진출 전략이 강조됐다.

물산업 주도할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향후 정부는 2017년까지 물산업 분야 수출 60억달러,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해 3대 핵심 수 처리기술, 통합 하천관리 및 수생태 복원 기술, 지능형 물관리 기술 등 물관련 R&D 규모를 2017년에는 2012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지능형 수자원 관리, 지능형 상수관망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기술을 통칭) 기술 개발에도 투자해 '지능형 수자원관리' 및 '지능형 상수관망 사업'을 추진해 우리의 IT 분야의 강점을 물관리 분야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 재이용을 '제3의 물산업'으로 육성해 물 재이용량을 2020년까지 2009년 대비 2.7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물시장 공략을 위해 아시아 워터 펀드(Asia Water Fund(AWF), 총 1,500억원 규모를 조성해 상수도, 하수도(생활 및 공업), 해수담수화, 산업용수, 재이용 등 물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개발형사업에 지분을 투자해 물산업 해외투자 촉매가 되도록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반강화와 전략적 진출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협의체)을 만들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전문대학원 과정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해 하천 종합정비, 수생태계 복원, 수자원 확보 등 통합 물관리 시스템과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려 한다. 4대강 살리기에 관심을 보인 국가(태국, 알제리, 인도네시아, 베트남)를 대상으로 수출 성공사례를 확보한 후 진출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차동민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건축과장
chadongmin@korea.kr

창의성을 계산하라 ; 3차원과 수학

창의성과 계산이라는 용어는 참 안 어울리게 들린다. 하지만 창의성은 계산될 수도 있다. 창의성은 평소에 재료를 모으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재료를 많이 모으고,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해 색다른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차원 바꾸기: 3차원을 벗어나라

우리가 3차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도 3차원에 고정시켜진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차원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3차원에서 시간 축을 포함해 4차원의 세계로 상상력을 높이면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타임캡슐 등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차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차원을 바꾸거나 차원을 낮추는 것도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다.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공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것, 즉 공간 여행을 시간 여행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선진국을 한 나라의 미래로, 후진국을 그 나라의 과거 모습으로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압축시켜 놓기도 하고 시간을 공간 속에 가둬 두기도 한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에 시공을 초월해 그리스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50여명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그의 상상력과 통찰력이 시간을 뛰어넘어 위대한 철학자들을 한곳에 모아 서로 만나게 한 것이다.

수(數)의 체계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차원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자연수(양의 정수)에서 출발해 '0'과 음의 정수, 유리수(분수)와 무리수, 실수와 허수로 발전하고, n차원의 수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벡터와 $n \times m$ 차원의 수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행렬로 발전했다.

수학을 이용하라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카데모스 숲에 세운 아테네 학당의 정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놓았다. 철학을 하는 데도 수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데도 수학이 필요하다.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경제학 연구에 있어 수학의 사용법을 말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수학을 아이디어 발상에 활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수학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학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언어로 번역하라고 했다. 그 다음 일상생활의 사례로 그것을 설명한 후 수학적 방법은 버리라고 했다. 만약 일상생활의 사례로 설명하지 못하면 수학적 방법 자체는 의미가 없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게중심이다. 상자 두 개를 들 때 같은 상자도 순서를 바꿔 무거운 상자를 위에 놓고 들면 더 가볍게 느껴진다. 이는 무게중심을 높여서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딕 포스베리는 세계 높이뛰기 사상 처음으로 바를 뛰어넘을 때 등을 밑으로 향하게 하는 '배면뛰기' 또는 '포스베리 플립'(Fosbury Flop)을 시도해 2m38cm라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땀다. 배면뛰기가 인체의 무게중심을 높여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조금씩 접근하다 보면 일상에 활용되는 수학은 그리 어렵지 않다.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수학을 하나씩 배워 보자. 박재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kwrho@mest.go.kr

경제학 박사. '두뇌 개발', '창의성'에 관심이 많으며, 생각을 꽃피우는 방법을 소개한 책 '생각 3.0'을 펴냈다.

創職

테크아트주얼리

예술적(art) 가치를 지닌 보석에
기술성(tech)을 조합...키스로 열리는 보석함

테크아트(Tech-art), 기술에 예술적 감성을 조합하는 일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사람들은 기술적 편리함을 원하면서 감성적 아름다움도 놓치기 싫어한다. 유명 화가의 작품이 새겨진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고, 신형 자동차가 출시될 때마다 디자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최근 한 드라마의 프러포즈 장면.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프러포즈를 하면서 보석함에 키스를 해보라고 한다. 여주인공이 입술을 대는 순간 보석함이 열리면서 'marry me!'라는 문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오고 동시에 LED 조명이 반지를 비추면서 돈다. 키스로 체온과 입김을 전달해야만 열리는 보석함. 예술적(art) 가치를 지닌 보석에 기술성(tech)을 조합해 탄생한 테크아트주얼리다. 이 매력적인 제품의 개발자 박문수 루부 대표(34세)의 창직 이야기를 들어보자.

학창시절 '발명'을 해보겠다고 혼자서 이것저것 만드는 데 온 시간을 보내던 박 대표.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대학생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해 200만원가량의 상금이 따라온 것이다. 박 대표는 그 돈으로 발명품 중 하나인 '키스로 열리는 보석함'을 특허 등록했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섰다.

"당시 국내 주얼리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중하위에 머물며 제조 중심의 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죠. 우리는 주얼리와 케이스가 일대일 거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케이스가 단지 포장이나 보관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안타까웠죠.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선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조력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브랜드마케팅만 제대로 해낸다면요."

박 대표의 판단은 옳았다. 마케팅 과정에서 보석케이스라는 말 대신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 '기술과 감성의 결합으로 탄생한 테크아트주얼리'라는 것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반 반지케이스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의 감동을 위해서 그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다.

테크아트를 표방하는 만큼 키스로 케이스의 잠금장치를 푸는 기술적 요소와 함께 외형적 아름다움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했다. "수많은 디자이너, 금형전문가를 만나고 다녔죠. 처음엔 머리에 떠오른 생각과 의도를 설명해도 그분들이 알아듣질 못했어요. 저 역시 그분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구요. 제가 디자인전문학교를 다니며 일러스트, 포토샵, 3D Max 등을 다 배웠더니 그때부터 그분들과 이야기가 됐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좌절할 순간은 없었을까? "좌절이라기보단 아쉬운 순간이 있었죠. 코엑스에 전시된 샘플 제품을 보고 일본 후지TV에서 취재를 해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홈페이지가 4번이나 다운될 정도로 반응이 엄청났지만, 수출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금형비용 등 제품 개발에 돈을 많이 쓴 상태라 제작비가 없었거든요."

상품성을 확인한 만큼 제작비 마련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다행히 후지TV에 방영된 것이 투자를 받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보석케이스에까지 돈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성과가 쌓여 지금은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홍콩 시장에까지 진입한 상태다.

청년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안(design)해가는 과정이기에는 창직이 곧 '디자인'이라고 정의하는 박문수 대표. 그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창직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 김윤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mulpure3001@daum.net



박문수 대표와 그가 고안한 '키스로 열리는 보석함' ▶

사회로 통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이 원하는 인재」 제대군인이 힘이 되어드립니다



제대군인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 책임감과 조직관리 능력 탁월

제대군인은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고 팀간 조직융화를 중시하며 기획, 행정, 인사, 물류, 보안 등 조직 시스템 운영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 강한 리더십

제대군인은 다양한 부대지휘 능력과 장병통솔 경험이 많으며, 부하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동기부여 등 높은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명확한 의사전달능력

제대군인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의 기획·예산·관리·보고 등에 익숙하며, 효과적인 업무처리능력이 있습니다.

▶ 전문적·기술적 역량 보유한 검증된 인력

제대군인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입니다.

▶ 근면 성실한 인품

제대군인은 규칙적인 생활과 근면 성실한 자세로 기업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검증된 우수 인력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창업상담, 무료 사이버 교육, 워크숍,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층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층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28 오정형외과빌딩 2층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번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 일산비스타 2층

장기화되는 유로존 사태, 위기 대응능력 강화하는 한국

Bloomberg, "Greece's euro exit won't look anything like 2008" (2012. 6. 10)

Le Figaro, "Séoul se prépare à une sortie de la Grèce de la zone euro" (2012. 6. 12)

Financial Times, "New Democracy takes lead in Greek polls" (2012. 6. 18) 등

6월 중에도 유로존의 상황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6월 9일 유로존 17개국이 스페인 은행권에 1천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17일에는 그리스 2차 총선과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가 실시됐다.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재정긴축 이행에 찬성하는 신민당이 승리를 거둔 후 연정 구성에 성공함으로써 일단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수그러든 상태. 프랑스 총선에서는 사회당이 압승을 거둬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성장 중심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들은 유로존 사태가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사태에 전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Bloomberg의 아시아 담당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은 6월 10일 칼럼에서 유로존 사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강도 높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아시아에서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 즉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Le Figaro는 한국의 5월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2위 무역 상대인 EU로의 수출이 16.4% 감소하는 등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이미 EU의 경기부진에 따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Le Figaro는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입 규모가 GDP의 97%에 달하는 등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유로 재정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해 산업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물경제동향 점검회의'가 열렸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외신들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대처 능력을 키워온 것과 한국 정부도 최악의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Bloomberg의 페섹은 그리스 경제가 붕괴할 경우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가장 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금리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 자국 경제를 방어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Le Figaro도 12일 기사를 통해 한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한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더 잘 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IMF 구제금융 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한국의 사례가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

● 이선하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유예된 그리스 위기’ 유로존 어디로?

세계
경제

Financial Times, "Greece gains some breathing space" (2012. 6. 19)
New York Times, "After Greek vote, Europe still has a host of problems" (2012. 6. 19)
New York Times, Paul Krugman, "Greece as victim" (2012. 6. 18)
Wall Street Journal, "A Greek reprieve" (2012. 6. 19) 등

지난 6월 17일 치러진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제1당에 오르고 연립정부 구성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가 일단 진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우선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이 관건이다. 신민당은 구제금융 및 긴축조치를 유지를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EU와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해 긴축의 강도는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은 6월 19일 사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시킬 구실을 찾기 위해 구제금융 협상안 폐기를 주장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총선 승리를 내심 원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신민당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이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일 것이다.

Financial Times는 19일자 사설을 통해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민당 대표의 불안정한 정치 기반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위기를 초래한 기존 시스템의 중심에 그가 있었던 만큼, 그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그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정치 불안정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계속된 긴축조치에 성난 민심을 달래는 것도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WSJ는 18일 보도에서 신임 정부의 첫 임무는 115억유로 이상 규모의 새로운 긴축정책을 승인하는 것인데, 이 경우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보다는 유로존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18일자 New York Times(이하 NYT) 칼럼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일정부 없는 단일통화 시스템이라는 유로존의 치명적 결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사회보장 비용 지원, 은행권 구제금융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주 정부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유로존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단일정부 시스템 없이도 단일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럽 선진국 당국자들의 오만으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지출 확대, 높은 인플레이션 허용 등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이들의 오만이 남긴 희생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NYT는 19일자 보도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유로존 지도자들이 유로존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따른 심대한 여파를 무릅써야 할 만큼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시급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 관련기사



지난 6월 20일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에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임 총리(가운데)가 연합정부 파트너인 사회당과 민주 좌파 대표들과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MANAGEMENT LECTURE

‘리스크 관리’, 핵심적이고 간결한 프로세스가 핵심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체계적 리스크(risk)가 발생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후 ‘위험관리’ 경영을 적절히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다시 큰 타격을 받았고 2010년 그리스 국가채무 사태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로 다시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었다.

제품·서비스 증가하면서 기업 내 프로세스 갈수록 복잡해져

기업에 있어 리스크는 기업이 생존·성장하는 데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공급망 내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해 일본 지역을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일본의 3대 자동차 회사는 자국 내 조업을 임시 중단했다. 도요타는 공장 12곳의 가동을 중단해 약 4만대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혼다는 예정돼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닛산 역시 5개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채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다양한 운영 리스크들이 일본 기업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친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로 나뉜다. 국내의 경우 체계적 리스크는 북한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 등 시장 자체의 위험이며, 비체계적 리스크는 공급 리스크, 수요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 기업 고유의 위험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여러 분야의 공급사슬관리 리스크

중에서도 운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정의된다.

리스크 관리를 제조업과 금융업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에서 1970~1980년대는 방어적 관리시기였다. 이 시기에 제조업에서는 손실 방지, 신용 관리, 감사절차 수립 등 방어적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으며, 금융업에서는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ARM(Asset Risk Management) 중심으로 위험관리를 했다. 1990년대에 제조업은 변동성 중심의 통제 지향적 리스크 관리를 시행해 사업 및 재무적 결과에 대한 변동성을 관리했으며, 내부 통제시스템 중심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업은 방어적 관리처럼 ARM 중심으로 관리되되, 1999년의 ‘바젤 I’ 통과로 시장 리스크를 감안한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비율 산출을 권고했다.

2000년대는 전사 통합적 관리시기로 제조업은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을 실시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통합관리를 지향했다. 금융업에서는 바젤Ⅱ안 규제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는 비즈니스 시스템과 통합을 지향한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보다 통합된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ERM과 비즈니스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업에서는 바젤Ⅱ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자기 자본비율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 감독규제인 바젤Ⅲ 도입을 앞



지난해 3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의 3대 자동차 회사가 공장 조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두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과 같은 위험 사회에서 기업은 수많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기업 내 프로세스는 날로 복잡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업 내 늘어나는 복잡성을 어떻게 컨트롤해 핵심적이고 간결한 프로세스로 유지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웃소싱·표준플랫폼 등을 통해 프로세스 최대한 간결하게

아웃소싱(outsourcing)의 장점을 이용해 공급자와 장기적 협력 관계를 맺고 특정 부품이나 프로세스를 확보해야 한다. 아웃소싱 전략이란 자신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들은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일체를 해당 분야의 전문기업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화를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공급업체의 핵심역량과 상호 연계시켜 기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1984년 GM사가 EDS사를 매수해 시설과 인력을 전면적으로 이관한 때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 정보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계의 주요 대안 및 필수적 경영기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다음은 프로세스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준플랫폼을 갖

춰야 한다. 플랫폼 구축은 관련 그룹을 하나의 장(場)에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표준플랫폼을 가지면 산출물의 변형이 용이해 다양한 신제품을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표준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상호 연동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 의사결정 시에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만 참여시켜야 한다. 기아자동차의 부사장 피터 슈라이어는 디자인 경쟁력에 관해 언급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부 디자이너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을 듣되, 최종 프로세스는 꼭 필요한 이해관계자로 제한함으로써 핵심 이해관계자인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간결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노키아는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닌 기업이지만, 인트라넷을 통한 전사적 의견공유로 인해 스마트폰 개발 시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의 8분의 1 수준으로 전락했다.

마지막으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혁신이 빨라지고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개발 시스템은 폐쇄된 혁신 시스템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은 기업 내·외부의 신기술, 지적 재산 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성공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리스크를 식별, 관리 및 완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부족이다. 공급 리스크를 생성하는 것은 글로벌 환경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추진 계획에도 리스크는 충분히 잠복해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을 통해 자사의 복잡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이드]



김수옥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kims002@snu.ac.kr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원 박사, 생산전략, 공급사슬관리(SCM), 서비스 운영관리를 전공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 부학장 및 서울대 경영정보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가속화된 OECD 연금개혁

OECD는 연금정책에 있어서 적절한 연금지급 수준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연금수급연령 상향, 연금급여수준과 기대수명의 연계 등 정책적 개혁은 물론 개인의 사적연금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계기가 됐다.

2007~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이후 경제, 재정 위기로 전개되면서 각국의 연금체계에 큰 영향을 줬다. 그 이전부터 연금의 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재정긴축 압력 아래 개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주로 부과식(PAYG; Pay-As-You-Go)인 공적 연금은 실업증가로 기여금 수입이 줄어드는 한편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연금급여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매우 악화됐다. 적립식인 사적연금체계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2007~2011년 사이 OECD 국가의 연금기금 평균 실질 순수익률은 -1.6%로 대부분 적자 상태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투자손실은 많은 연금 가입자, 특히 은퇴를 앞둔 확정기여형(DC) 연금가입자의 은퇴소득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고 또한 확정금부형(DB) 연금기금의 적립수준도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연금개혁은 경제위기 초기단계엔 종종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연금지급 수준의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재정긴축 압력이 커지면서 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연금수급연령 높이고 더 오래 일하도록 제도 개선

연금개혁은 2007~2010년 전반적으로 가속화됐는데 연금수급연령(pensionable age) 상향, 근로유인(work incentive) 강화, 물가연동제(indexation) 수정 등 주로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져 왔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미래 연금지급 수준을 보면 평균 20~25% 정도가 삭감됐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절반의 OECD 국가에서 공식적인 연금수급연령이 65세가 될 것이며, 14개국은 67세와 69세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OECD 국가의 예상은퇴기간(연금연령에서의 기대여명)은 2010년 18.5년에서 2050년 20.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탈리아(2013년부터)와 덴마크(2020년대 중반)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재정부족 위



호주 시드니의 한 양로원에서 입소 노인 및 가족들이 파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힘을 줄이기 위해 연금수령연령과 기대수명을 연계하는 자동조정기제(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2050년 연금연령이 69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연령의 상향조정에 더해 14개국은 근로자들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했다. 호주와 프랑스는 연금제도 내에서 근로생활이 길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했고, 스웨덴은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과 사회보장부담금 면제를 통해 더 오래 일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노인에게 대해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부 국가는 연금의 조기수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자발적 조기은퇴제도의 매력을 줄이고(덴마크), 부분연금 요건을 강화(핀란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연금지급수준을 임금이나 물가수준의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대하게 설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엄격하게 하기도 한다. 독일과 같이 비교적 관대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으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약 절반의 OECD 국가가 물가연동 요건과 산정공식 변경을 통해 지출을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OECD는 이러한 공적연금 지출을 줄이는 조치들이 노

후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비용을 세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적연금의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공식 은퇴연령에 도달할 때 받게 되는 가입기간 평균 순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은 평균 약 50% 정도다. 사적연금 가입을 강제화(호주, 칠레 등)하거나 준강제화(덴마크, 네덜란드 등)한 13개국의 경우 사적연금을 포함한 강제적 연금 전체의 순소득대체율이 평균 약 69%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아일랜드, 일본, 미국 등 10여개 국가는 순대체율이 60%에 못 미쳐 큰 '연금격차'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사적연금이 임의가입으로 돼 있어 노동력의 절반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OECD는 이들 국가의 연금 격차를 줄이고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의무가입으로 인해 새로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또 다른 세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금의 가입강제화가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소위 '자동 가입제도'(개인이 사적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탈퇴할 수 있도록 함)를 들 수 있다. 2007년 도입된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KiwiSaver)는 이러한 제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키위세이버의 경우 신규 가입자의 탈퇴율이 20% 정도로, 가입범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아일랜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영국도 2012~2017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정책은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임의적 제도를 가진 국가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는데, 노후대비저축을 하도록 장려하는 전통적 방법인 조세 인센티브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OECD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한도 내에 매칭(matching) 방식의 기여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기여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인센티브는 이미 만만치 않은 공공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퇴직저축상품에 대해 이러한 인센티브를 도입한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다른 소득집단과 비슷하게 나타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연금 가입 확대할 유인책 고안해야

사적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것 외에 은퇴 후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부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 왔다. 지금 당장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생활수준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로 사회안전망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부수준 상향, 고령자 등 특정집단에 대한 추가 세금감면 등이 일반적이다. 한편 장래의 연금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데 호주는 사적연금의 최저 기여율을 현재 9%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2%로 높일 계획이다.

사적연금과 관련된 그 밖의 제도개혁은 규제의 유연성과 위험관리와 관련이 있다. 연금관리기구의 통합합을 통한 행정적 효율성 제고, 투자방법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권 강화, 연금기금의 투자제한 일부 완화, 연금기금의 지불능력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다양한 변화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OECD는 사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금의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고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기금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가속화된 연금개혁의 가장 주된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다. 재정안정을 위한 급여삭감과 연금연령 상향조정 등의 연금개혁에는 정치적 저항이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며, 2007년 위기 이후 모든 OECD 국가가 은퇴소득제도를 어떠한 형태로든 바꿔왔다.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기대수명 증가가 대체로 연금연령의 상향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연금의 재정적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는 미래 세대의 은퇴자에게는 곧 더 낮은 공적연금 수급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연금격차'는 은퇴시기의 연기, 사적연금저축 확대 등을 통해 메워야 할 것이다.

OECD는 연금정책에서 언제나 적절한 급여와 지속 가능성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첫째, 연금수급연령 상향, 연금급여수준과 기대수명의 연계 등을 통해 연금수급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한편 둘째, 공적연금 대상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셋째, 사적연금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은퇴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연금정책 방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동시에 공적·사적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급여의 적정성도 함께 높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고 연금수급연령도 높이는 개혁을 해왔지만 연금기금 고갈의 위험은 여전하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 상향계획을 좀 더 앞당기고 연금기여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에서 퇴직연금을 우선 적용하는 자동가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OECD의 지적처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송홍석
주OECD대표부 참사관
song0210@empas.com

WTO

IMD가 제시한 한국의 2012년 정책과제는?

스위스 소재 IMD의 2012년도 세계 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9개 평가대상 경제권 및 국가 중 홍콩이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2위를 점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국 및 일본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됐다.

스위스 로잔(Lausanne)에 위치한 세계적 경쟁력 평가기관인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원)는 매년 상반기 「세계 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한 2012년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9개 평가대상 국가 및 경제권 중 홍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홍콩과 함께 공동 1위를 했던 미국은 올해 1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5위였던 스위스가 3위로 다소 상승했다. 반면 싱가포르 및 스웨덴은 올해 각

각 4위와 5위를 차지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1단계씩 하락했고, 독일 및 영국의 경우 각각 1단계 및 2단계 상승한 9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만(6→7위)과 일본(26→27위)의 순위가 소폭 하락하고, 중국(19→23위)도 다소 하락폭이 큰 반면 말레이시아(16→14위)는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22위로 지난해와 같아

현재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PIIGS 국가들의 경우에는 등락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스페인(35→39위), 포르투갈(40→41위), 그리스(56→58위)의 순위는 하락한 반면 아일랜드(24→20위), 이탈리아(42→40위)의 순위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석유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2단계 하락했지만 10위를 차지함으로써 네덜란드(11위) 및 룩셈부르크(12위)보다 상위에 랭크됐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2단계나 상승한 16위를 기록함으로써 핀란드(17위)보다 앞서게 됐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대내외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표 1〉 주요 국가 및 경제권별 경쟁력 순위

홍콩	미국	스위스	대만	독일	영국	한국	중국	일본
1(1)	2(1)	3(5)	7(6)	9(10)	18(20)	22(22)	23(19)	27(26)

주: 괄호 안은 전년도 순위

〈표 2〉 한국의 역대 IMD 평가순위 추이

	1997	1999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30	41	32	31	27	23	22	22



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2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IMD가 1997년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등위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 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제고돼 왔거나 최소한 특정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MD는 주요 국가 및 한국의 경쟁력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모두 4개의 주요 요인(factor)으로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다시 세분화해 항목별로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주요 요인으로 경제적 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구축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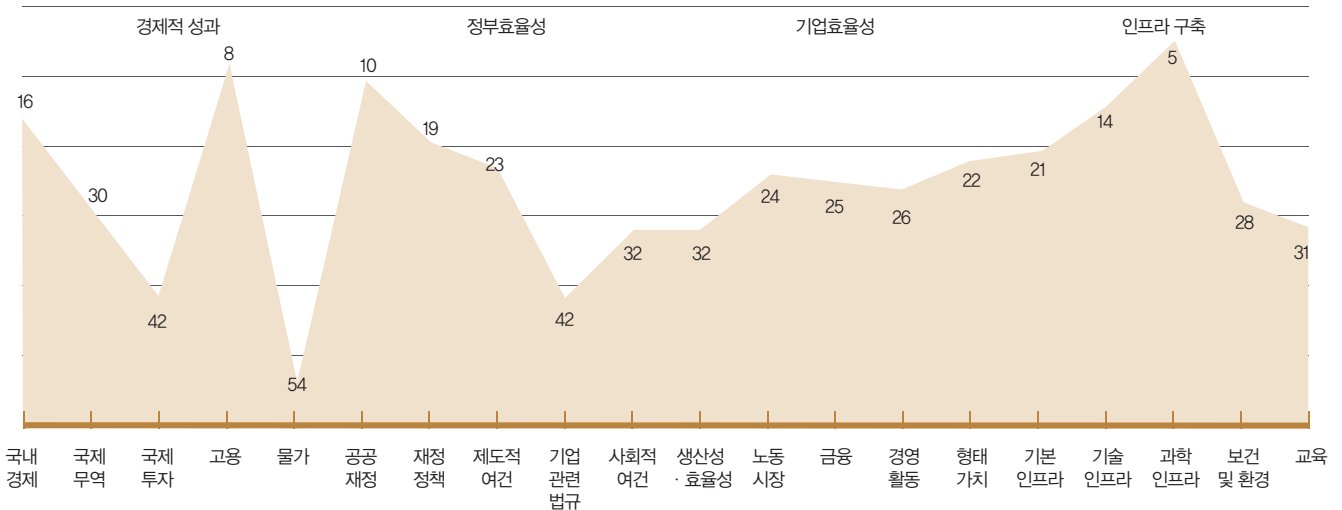
이에 따라 4대 부문에서의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 효율성(22→25위) 및 경제성과(25→27위)가 다소 하락한 반면 기업효율성(26→25위)은 소폭 개선됐고, 인프라 구축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20→20위)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적인 4대 평가부문을 다시 주요 요인의 세부 항목별로 나눠서 국내경제, 공공재정, 생산성 및 효율성, 기본 인프라 등 20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세부 분야별로는 장기실업률(1위), 고등교육 수확률(2위), 경제의 다양성(3위) 등의 항목은 5위 이상 상위수준에 달했으나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계약(58위), 외국인 직접투자(55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 등의 항목은 50위 이하 하위수준에 포함됐다고 평가됐다.

IMD 지표, 국가 간 비교보다는 정책활용이 중요

이번 IMD 평가에서는 별도로 '세계화' 및 '경제·사회 개혁 필요성'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별 순위도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10위, 경제·사회개혁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9위를 차지함으로써 모두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참으로 세계화 추진에 대해 아일랜드, 홍콩 등은 긍정적 입장이지만 스페인, 프랑스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일랜드, 홍콩, 카타르, 스위스 등은 긍정적이지만 스페인, 프랑스 등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MD가 평가한 한국의 경쟁력 지형도(등위)



IMD는 세계 경쟁력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평가대상 국가(총 59개국)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개도국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정부 및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MD의 경쟁력 지표가 국가 간 단순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달성에 사실상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 과정 및 그 성과로 여타 신흥개도국과 개도국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조선 등 상당한 분야에서 이미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경쟁국을 추월한 것은 물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을 대상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의 특정 분야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노동관련 사회적 협력, 핀란드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투자 등이 향후 한국이 지향할 정책적 목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방

〈표 3〉 세계화 및 개혁에 대한 인식 순위

	아일랜드	홍콩	카타르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한국
세계화 추진	1	5	27	24	43	59	10
개혁 필요성	1	5	6	7	53	59	9

〈표 4〉 IMD가 제시한 한국의 2012년 정책과제

- ① 세계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 ② 인플레이션의 완화
- ③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실업 완화
- ④ FTA 확대와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강화
- ⑤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 확대

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IMD의 다양한 의견 및 지적 사항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적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재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상현
주재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shwoo@naver.com



유로존의 위기 방화벽, EFSF와 ESM

(유럽금융안정기금)

(유럽안정기금)

유로존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결정된 2010년 5월을 위기의 시점(始點)으로 잡아도 만 2년 넘게 지났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확산일로에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았고, 최근에는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인 스페인마저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처지가 됐다. 소국(小國)이기는 하지만 키프로스도 조만간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로존 17개국 중 5개국이 자력 위기극복에 실패한 셈이다.

경제 규모가 유로존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위기로 확산된 데에는 1999년 단일통화 도입 이후 유로존 각국의 경제 · 금융 부문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은행 부문 지원용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확정된 이상, 정부부채비율이 120%를 상회하는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요청도 시간문제다. 유로존은 해체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전후 반세기 이상 느리지만 꾸준히 경제 · 통화 통합을 추진해 온 유럽연합(EU)과 유로존이 쉽게 단일통화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EU와 유로존은 구제금융 지원을 통한 단기 대응과 함께 회원국별 경제 · 재정정책에 대한 상호감시를 강화하고(European Semester 시행), 재정준칙 위반 회원국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Economic Governance 강화), 재정준칙 자체를 엄격화하는 신재정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MU)에 서명하는 등 위기재

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재정통합 없는 단일통화'라는 유로존의 근본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단일 예금보호제도와 은행정리기금의 도입,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연합(Banking Union) 구상이 제기되고,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보증하는 유로채권(Euro Bonds) 발행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위기의 진행 양상이나 대응책을 전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현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가 아니라 유로화 통화권의 구조적 문제이면서 위기 당사국들의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 결핍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물 · 금융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단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 크기 역시 짐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유로존 위기 동향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분석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유로존이 단기 대응수단으로 또 위기확산 방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제금융기금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EFSF 이어 7월부터 ESM 출범

2012년 6월 현재 EU와 유로존이 회원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제금융기금은 모두 네 종류로, 국제수지지원기금(BoP기금; Balance of Payment Assistance), 그리스 구제금융기금(GLF; Greek Loan Facility),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M; European Financial Stabilisation Mechanism),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이 그것이다. 2012년 7월부터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항구적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기금(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이 출범할 예정이다.

BoP기금은 비(非)유로존 EU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 설치됐으며, IMF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oP기금의 규모는 설치 당시 120억유로였으나, 2008년 12월 250억유로로 증액됐고 2009년 5월 현재 수준인 500억유로로 증액됐다. 2012년 6월 현재 BoP기금 수혜국은 헝가리, 라트비아, 루

마니아 3개국으로 총지원확정액은 160억유로이고 기지급액은 134억유로다.

2010년 5월 유로존은 총 1,1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계획을 확정했다. 유로존과 IMF가 향후 3년간 각각 800억유로 및 300억유로의 양자대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유로존 지원액은 유럽중앙은행(ECB) 지분율에 따라 독일 224억유로, 프랑스 168억유로, 이탈리아 147억유로 등을 분담하기로 했다. 2011년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529억유로(IMF 지원자금 포함 시 730억유로)가 집행됐으며, 2012년 3월 유로존과 IMF가 총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그리스 구제금융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집행이 중단됐다.

유로존은 1차 그리스 구제금융계획을 확정된 직후 위기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금융기금으로서 총 5천억유로 규모의 EFSF 및 EFSM 설치에 합의했다. 당시 발표된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총규모는 IMF의 2,500억유로를 포함해 총 7,500억유로에 달했다. 이후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유로존은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FSF의 실질 가용규모와 지원방식, 존속기한 등을 개선했다. 현행 EFSF의 지급보증 규모는 총 7,800억유로(독일 2,110억유로, 프랑스 1,580억유로 등)로 출범 당시의 4,400억유로에 비해 크게

〈표 1〉 EU 및 유로존의 구제금융체계

	BoP	GLF	EFSM	EFSF	ESM ¹⁾
지원대상	비유로존 EU회원국	그리스	EU회원국 (실제로는 유로존 회원국)	유로존 회원국	유로존 회원국
기금규모(억유로)	500	800	600	4,400	5,000
설치근거	EU이사회규정	유로존 합의	EU이사회규정	EFSF협정	ESM조약
설립시기	2002년	2010년 5월	2010년 6월	2010년 6월	2012년 7월
자금조달	EU채권 발행	유로존 양자대출	EU채권 발행	EFSF채권 발행	ESM채권 발행
지급보증 (보증규모, 억유로)	EU예산(500)	-	EU예산(600)	유로존 회원국 (7,800)	유로존 회원국 (7,000)
지원현황 ²⁾ (억유로)	헝가리 200/65/55 라트비아 75/31/29 루마니아 250/64/50	그리스 1,100/800/529	아일랜드 850/225/184 포르투갈 780/260/201	아일랜드 850/177/120 포르투갈 780/260/148 그리스 1,726/1,446/729	스페인(추정) ³⁾ 1,000/1,000/0

주: 1) ESM은 총 7천억유로의 납입자본(800억유로)과 대기성자본(6,200억유로)으로 설립되는 금융기관 성격

2) IMF 등 포함 총구제금융액/기금별 지원확정액/기금별 실제지급액(2012년 6월 기준)

3) 스페인 은행 부문 구제금융은 최대 1천억유로로 지원기금(EFSF 또는 ESM)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표 2〉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가용한도

(단위: 억유로, 2012년 6월 기준)

	GLF	EFSM	EFSS	ESM	비고	합계
2012년 6월 이전	529 (529)	600 (485)	4,400 (1,883)	—	ESM 발효 전	5,529 (2,897)
2012년 7월 ~2013년 6월	529 (529)	600 (485)	7,000 (2,883)		EFSS 신규지원 가능 EFSM 신규지원 가능	8,129 (3,897)
2013년 7월 이후	529 (529)	485 (485)	7,000 (2,883)		EFSS 신규지원 금지 EFSM 운영 종료	8,014 (3,897)

주: 지원 만기(EFSS 15~30년, EFSM 평균 12.5년 등)를 감안, 조기상환은 없는 것으로 가정. 괄호 안은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스페인 은행 부문 구제금융 등을 포함하는 기금별 소진액(가자급액 포함)

증액됐으며, 출범 당시 위기국 대출로 제한했던 기금 지원방식도 예방적 대출, 은행 자본확충 지원, 국채시장 개입 등 다양한 시장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한 당초 2013년 6월까지 운영 예정이던 계획을 변경해 2013년 7월 이후에도 당분간 EFSS를 운영하되, 구제금융의 회수·관리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총 4,400억유로의 EFSS 가용액 중 2012년 6월 현재 아일랜드 177억유로, 포르투갈 260억유로, 그리스 1,446억유로 등 총 1,883억유로가 지원 확정됐다.

EFSM은 2010년 5월 발표된 총 7,500억유로의 비상 구제금융기금 체계의 한 축이다. EU 예산을 보충재원으로 하는 점과 EU회원국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BoP기금과 동일하나, 실제로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 600억유로의 기금규모 중 2010년 6월 현재 485억유로를 지원 확정했다.

한편 아일랜드 재정위기 등으로 위기확산 우려가 심화되던 2010년 말, 유로존은 EFSS 및 EFSM을 승계하는 항구적 구제금융기금으로 총 5천억유로 규모의 ESM을 2013년 7월부터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독일 1,900억유로, 프랑스 1,427억유로, 이탈리아 1,254억유로 등 유로존 국가들이 총 7천억유로(납입자본 800억유로, 대기성자본 6,200억유로)의 자본금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며, 800억유로의 납입은 2014년까지 조기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구제금융기금의 기능 개선과정에서 ESM도 EFSS와 동일한 시장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범시기도 2012년 7월로 앞당겼다. 아울러 당초 5천억유로 수준이었던 ESM·EFSS의 통합 지원한도를 7천억

유로로 증액함에 따라 2012년 6월 현재 유로존의 신규 구제금융 지원 가능액은 약 4천억유로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금 규모의 적정성·건전성 문제도 제기돼

향후 유로존 위기의 추이에 따라 구제금융기금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부부채 규모가 2조5천억유로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스페인에 대한 본격적 구제금융과 이탈리아 구제금융이 현실화될 경우 약 4천억유로 수준인 현 가용규모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EFSS와 ESM은 유로존의 지급보증 또는 출자에 기초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위기가 추가로 확산될 경우 위기국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들 국가가 지급보증·출자를 분담하고 있는 EFSS·ESM의 채권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EFSS·ESM 발행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고 기금 자체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EFSS와 달리 ESM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조항이 있어 ESM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의 발행 국채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정원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순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재경관
lee-ms@korea.kr



중국 에너지절약 환경설비시장에 주목!

지난 5월 24일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감 및 재생에너지 이용 관련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증가한 979억위안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유로존의 위기 여파로 중국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재정수입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지만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감소'(節能減排) 관련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멘스(Siemens)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실제 가정에서 소비될 때까지 최초 에너지의 20%만이 사용되고 나머지 80%는 발전단계, 송배전단계, 가정에서의 대기전력 등으로 대부분 낭비된다고 한다. 에너지정책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효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공업화 중기단계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서 에너지소비가 많은 구조다. 필요한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에너지절약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2007년 이래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감소 정책에 1조위안 투자

지난 5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에너지절감 및 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해 올해 979억위안에 달하는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251억위안 증액된 규모로 재

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순환경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중앙정부의 사회인프라 건설 투자까지 합치면 관련 예산이 1,700억위안에 달한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관련한 업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대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첫째, 지난해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베이징, 선진, 장시성 신위(新余) 등 8개 재정정책 종합시범도시에서 먼저 추진한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감소 시범사업의 조속 시행, 시범지역 확대, 정책 정비 등이다. 둘째,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상품의 소비촉진 및 태양광발전 규모확대로서 올해 255억위안을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의 소비진작에 배정한 것이다. 셋째, 에너지절감기술 개조, 낙후생산설비 도태, 우수처리시설 파이프연결망 건설, 에너지절약형 건축, 농촌 환경보호, 대기오염 방지 등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관련된 중점 사업의 전면적인 심화 추진이다. 넷째, 에너지성과계약(EPC), 선진 환

경보호기술 시범추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시범사용을 널리 보급하는 한편 전국 중대형 도시에서 혼합동력을 이용한 대중교통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여섯째,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재생에너지 이용의 청결화 전략이다. 일곱째, 순환경제 및 청결생산을 촉진해 전국적으로 자원순환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여덟째,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감소 시장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세계화를 핵심으로 한 세계개척을 단행하며 생태환경 보상 시범지역 확대, 탄소 및 오염물 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2007년 이래로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배출감소 정책에 중앙정부는 총 3,800억위안 이상의 자금을 지출했으며, 지방정부 재정지출까지 포함하면 총 투입액은 1조위안에 이를 정도다.

중국 공업신식부가 연초에 발표한 '환경보호설비 12.5 발전계획'에 따르면 12.5 기간 환경설비 총투자액은 3조1

천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환경설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탈황·탈질, 도시오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투자액이 6천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공업 잔열잔압발전, 폐열·폐수·고체 폐기물(3폐) 종합이용, 연진·분진 제어 등 관련 설비의 거대한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향후 대기오염 처리설비, 고체폐기물 처리설비, 환경감시전용 계측설비 등 환경과 관련한 장비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적용영역의 확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PM2.5) 측정 의무도시 확대, 발전소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쓰레기 배출비용 징수폭 확대,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배출 시범도시 확대 등 환경보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환경계측기기, 탈질제품 및 기술,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환경보호부는 중국 5대 전력그룹과 12.5 계획 기간 동안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탈질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01 세계 최초로 호텔 외벽에 태양열 전지를 적용한 중국 허베이성의 한 호텔 02 지난 6월 11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한-산시성 에너지절약 기술 발표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에너지절감, 저탄소, 녹색혁신기술과 상품을 발표하고 있다.



02

지역별 경쟁적으로 녹색성장 전개… 진출기업들 중 정책 추이 예의주시해야

중국은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에너지절약 홍보 주간을 맞이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공업정보화부 등 각 부처에서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대대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서는 매년 에너지 관련 대표 주제를 선정해 각종 교육과 홍보활동이 펼쳐지며 올해의 주제는 ‘에너지절감 저탄소, 녹색성장(節能低碳, 綠色發展)’이었다. 앞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TV·열수기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 상품을 구입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추천하는 제품 리스트와 판매점은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발표한다.

코트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 6월 11일 시안에서 산시성 에너지절약협회와 공동으로 ‘한-산시성 에너지절약 기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LED 조명, 수처리 및 소각설비 등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발표했고, 산시성의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기업 외에 지멘스에서는 발전소 등 대형 에너지소

모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스템 활용에 대한 기술을 발표했다. 지멘스는 지난해 산시성에서 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신기술 발표회를 열고 양자 간에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했으며, 산시성 대형 국유기업인 산메이그룹, 산지엔그룹 등과도 프로젝트 협력협의를 체결한 바 있다. 지멘스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산시성에서 추진하는 대형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계의 공장,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던 중국이 이처럼 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각 성시별로 경쟁적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설비 관련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진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한경닷컴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OTRA 및 KDI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복
KOTRA 중국 시안 무역관장
goldjb@kotra.or.kr

2012년 『나라경제』는 연중기획으로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를 진단해본다. 2011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특성, 외국인 이주자들의 고충, 다문화 사회의 국민의식, 이주민 정책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국내 1호 다문화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이상덕 교장

기술 통해 자립기반 다지면 다문화가족 삶의 질까지 좋아져

지난 3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기술대안고등학교인 한국폴리텍다솜학교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스마트전기와, 플랜트설비과, 컴퓨터기계과 총 3개 과에 다문화청소년 15명씩을 전공별로 모집, 우리나라 최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정엔 1학년 45명의 학생들이 언어와 기술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양손에 학생들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걸어오는 이상덕 한국폴리텍다솜학교 교장(57세)을 만날 수 있었다.



첫 학기라 학생모집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전문계 고교입시가 끝난 다음에 모집을 했는데도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했다. 국제결혼으로 생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졌고 또 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뜻일 거다. 45명 중 중국 출신이 80% 이상이고 베트남, 몽골, 러시아, 대만, 필리핀 출신 학생들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지에서 태어났다가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 학생들이다.

중도입국 학생이면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과 차이가 있나.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에 환경이 달라지니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말이 안 통해 한국인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혈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양한 청소년기 자녀를 돌보면서 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법률적으로는 가족이어도 관계에선 가족의 개념을 벗어난 가정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초·중등과정에서 한국시스템을 경험해 상대적으로 낫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해 자녀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편이다. 우리 학교는 학비를 모두 지원하고 기숙사를 갖춘 데다 국민학생의 경우 식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다문화가정의 관심이 높다. 벌써 내년도 입학 문의가 있다.

입학 자격이 따로 있다.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 건가?

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중도입국 학생이라면 본국에서 학력인정 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언어능력을 우선으로 봤고, 학생과 부모를 함께 인터뷰했는데 짧은 대화론 부족해 내년에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나 고민이다. 언어실력에 편차가 커서 수준별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와 별개로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중등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학습훈련이나 욕구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 학교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등과정 혹은 예비학교과정이 강화돼 이탈하는 학생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언어편차가 크다고 하셨는데 수업엔 지장이 없다. 외국어 교사가 없는데...

다행히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중간중간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와줘서 수업엔 무리가 없다. 아직은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파악하는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당장은 교육경험이 짧은 만큼 동시에 개교한 서울다솜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 기술교육을 받을 때 꼭 필요한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해 성취도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 관련 용어에 영어가 많은데 중국, 러시아 등은 영어 노출이 적은 나라라 학생들이 영어 공부도 해야 한다. 기술에다 한국어, 영어까지 배우려니 스트레스가 많다. 아이들에게 더 밀착해달라고 선생님들께 부탁한다.

중국 출신 학생들이 많으면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이 소외되지 않나?

서로 잘 어울린다. 게다가 사람은 다 살게 마련이라고(웃음) 소수 출신끼리 연대를 하더라. 중국 출신 학생끼리는 중국어를 쓰기도 하고 다국적 군단은 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한국어만 쓰라고 강요하진 않았다.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를 늘려주려 한다. 한국어 사용도 높이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도 주려고 방과후 학습에 연극과정을 한 번 넣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고 호응이 좋았다. 직접 대사도 만들고 역할도 나누고, 여름방학 때 연극캠프를 구상하고 있다. 그때 학부모들도 참관하게 하려고 한다.

폴리텍다솜학교는 기술형 대안학교다. 기술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1학기에는 한국어와 학교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과목

은 기초적 개념과 용어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2학기부터 일부 기술교육이 더 들어간다. 3학년 때는 기술교육에만 집중해서 실습·심화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다문화학생들이 기술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기도 하다. 개인의 적성도 있지 않나.

기술 분야로의 진출은 구체적이고 취업경로가 명확해 다문화학생들에게 적절하다. 실무 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취업과 연계되면 학생 개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그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는가는 그 가정의 생활과 직결된다. 그런 면에서 국가기간산업인 기술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뛰어들고 이들이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다문화청소년들은 개인의 자본 자체가 부족하다. 직업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이들의 눈높이에서 진로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과 바로 이어질까.

대학, 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여러 가지 체계를 짜고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사 자격증 정도는 모두 따게 할 것이다. 실습보다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게 어렵겠지. 사무자동화 능력은 기본으로 있어야겠고, 한국어능력시험도 가급적 응시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취업 여부보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겠단 태도를 갖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는 데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문화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급한 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위탁교육과정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문화학생들과 함께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다. 인종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육 말이다.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길러내도 그들을 고용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들의 역량이 아니라 사회의 인식 수준에 달려 있다.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국적이 어디냐, 나중에 돌아갈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럼 공부 안 시킬 건가. 한국에 우호적이면 정착하고 나쁘면 돌아가겠지. 그럼 왜 돌아가고 싶겠나. 차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때다. 박영민

●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 올바른 용어 사용부터

지난 4월 말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14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이주노동자는 60여만명(재외동포 30여만명 포함)에 이른다.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 통과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력이 들어온 지 8년 만의 일이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이 적정 규모의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4년10개월 동안(3년 계약+1년10개월 재계약 가능)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필리핀을 비롯 아시아 15개국과 MOU를 체결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소위 3D업종에 외국인력이 유입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중국·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가 시행됐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다. 그러다 보니 이주노동자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사업주에게 주어져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직장변경 횟수 제한이 있다. 3년의 고용기간 동안 3번 직장변경이 가능하고 1년10개월의 재계약기간 동안 2번 직장이동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M씨는 첫 번째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와 '흉쇄관절염 및 경추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판정을 받지 못했고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사업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직장변경횟수 제한에 걸렸다. 마지막 사업장의 사업주는 M씨가 더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두세달씩 미뤄 지불하기 시

작했다.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M씨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 싫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텼다. 하지만 결국 몸에 무리가 와 그만두고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게 됐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 갚기로 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왔는데 되레 빚만 떠안고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고용주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고용허가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도 같은 동포로 보려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주노동자를 이방인 취급하거나 범죄자 집단처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가령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에는 보이지 않게 차별적 요소가 내포돼 있다. 구분과 차이를 연상시키는 '외국인노동자'보다 단지 국경을 넘어 이주해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이주노동자'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도 이방인이나 침입자라는 뜻이 포함된 외국인노동자(foreigner worker)보다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다. 범죄자를 연상시키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도 단지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해 체류가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체류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 **김재**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처장
smcw28@gmail.com

아프리카 IT 허브를 꿈꾸는 르완다에서의 2년



2010년 르완다 엑스포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e브로슈어를 제작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진은 현지인에게 e브로슈어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사실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솔직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열악한 아프리카 오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지구 반대편에서 외롭게 지냈다. 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은 물론 기본적인 물과 전기도 부족한 곳에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끔 르완다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꾸다. 한국에서 르완다 꿈을 꾸다니, 현지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떠나고 나서야 그곳에서의 시간이 소중했음을 깨달았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최빈국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르완다는 더 힘든 사정에 처해 있다. 게다가 1994년 종족 분쟁으로 인한 학살의 아픔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르완다를 돕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봉사단체들이 르완다에 진출해 있고, 많은 국제 봉사자들이 활동 중이다. 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 현지 정부기

구에 IT 봉사단원으로 파견돼 활동했다.

처음 아프리카에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위험하고 힘들 텐데 왜 가려느냐며 난리였다. 내가 봉사활동 파견지로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국가가 아닌 아프리카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인생을 통틀어 언제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는가 싶어서였다. 전혀 새로운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두 번 다시 갖기 어려운 인생의 기회로 여겨졌다.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과감하게 아프리카로 지원하게 됐다.

그렇게 떠난 르완다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현지인들의 무관심과 느릿느릿한 일처리 방식이었다. 어떤 일이 늦게 처리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항의를 하면, 보통 사과 대신 “This is Africa”(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정말 황당한 경우도 많았지만 이 또한 특유의 현지 문화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나중에는 현지인 동료들이 일처리를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며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독려했다.

르완다는 대한민국을 경제발전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천연자원이 적은 점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IT를 주력 산업으로 키워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IT 허브(Hub)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동안 다양한 IT 프로젝트에 참여해 제2의 대한민국이 되려 하는 르완다의 경제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정말 감회가 새로운 일이다. 단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르완다가 실제로 발전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봉사활동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위한 자발적 활동이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삶과 영혼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는 남을 위해 봉사를 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내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메달라가던 영혼을 의미 있는 신념들로 채울 수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아직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인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준우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joonoo.kim@gmail.com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의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01 프랑스아 제라르,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1805년, 캔버스에 유채, 255×145cm, 파리 카르나발레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드농의 날개’(Aile Denon) 전시장에는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초상화가 한 점 있다. 그 매혹적인 자태 앞에 누구도 무심코 지나치기 어렵다. 그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인상적인 눈초리로 방문객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차림새는 웬지 낯설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고대인의 모습이다. 그녀가 몸을 기대고 있는 소파도 그리스인들이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던 것이다. 왼편에 자리한 촛대 역시 고전적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초상화의 주인공은 고대인일까? 아니다. 그녀는 19세기 초 프랑스 사교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레카미에 부인(1777~1849년)이다. 그녀는 왜 이런 연극무대 속의 인물처럼 낯선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비밀의 실타래를 풀 열쇠는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 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혁명의 시대였다. 구체제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고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예술도 마찬가지로였다. 경박한 주제와 감각적인 표현의 로코코 미술이 고상한 미감을 몰아낸 지 오래였다. 고전미술의 부활을 통해 혼탁한 미술계를 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미술에서 나타나는 영웅적인 주제와 간결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부활시키자는 것이었다. 자크 루이 다비드

(Jacques Louis David, 1748~1825년)가 주도한 신고전주의는 그런 움직임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는 출정을 앞둔 용맹한 전사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시는 소크라테스 등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적이고 숭고한 에피소드를 간결하고 안정적인 구도 속에 정적으로 표현했다. 로코코 미술에 식상한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혁명 진영에서도 그의 애국적인 주제와 고전적 미학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으며, 그를 혁명화가로 추대했다.

혁명이 성공하자 집정정부는 고전정신의 부활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로마인의 금욕적 생활양식이 혁명정부의 중심적 가치로 자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비드가 고안한 혁명의 축제에는 고대의 의식처럼 연출됐고 혁명위원회의 의자도 고대의 의자를 본떠 제작됐다. 특히 여성복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리스 로마의 튜닉(tunic)에서 힌트를 얻은 흰색의 새로운 드레스는 패션리더들 사이에 큰 인기를 모았는데 이 옷은 가슴 바로 아래에 허리띠를 둘러 기다란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한편 가슴을 깊게 파고 팔의 대부분을 드러낸 파격적인 것이었다(이 드레스는 혁명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엠파이어 실루엣’으로 불렸는데 이는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 왕비가 착용하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02



03

02 자크 루이 다비드,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1800년, 캔버스에 유채, 173×244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03 장-로랑 모스니에르, 루이즈 드 비당, 1802년, 캔버스에 유채, 130.5×99cm, 모스크바 트레티아코프 미술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은 그런 혁명기의 사회분위기를 전해준다. 공연히 멋 부린 연출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가 걸친 드레스는 허리라인을 강조한 전형적인 ‘엠페이어 실루엣’이며 머리는 로마식으로 짧게 자른 후 그 위에 헤어밴드를 두르고 있다. 소파와 촛대도 이 시기의 그리스-로마 취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비드가 고안한 것이다.

초상화의 주인공인 레카미에 부인은 리옹의 부르주아 집안 태생으로 15세 때 자신보다 30년이나 연상인 은행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파리 사교계의 명사로 그녀의 살롱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드나들었는데 남성들은 그녀의 우아한 외모와 성격에 반해 거의 숭배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녀는 성(性)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여성적 매력을 반감시키진 않았다고 한다. 낭만주의 문학가인 샤토브리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실한 숭배자였다. 그러나 레카미에의 살롱에는 왕당파 인사들이 많았던 데다가 조세핀의 시중을 들라는 나폴레옹의 요청을 거부해 미움을 사자 레카미에 부인은 이탈리아로 망명하게 된다.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파리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재정 파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코 살롱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녀는

7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특유의 지적이며 순결한 매력을 잃지 않은 파리 살롱의 전설이었다.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은 프랑수아 제라르(1770~1837년)에 의해서도 그려졌는데 자기 외에 제자인 제라르에게도 초상화가 주문된 사실을 안 다비드는 불쾌감에 그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대에는 다비드의 작품보다 제라르의 작품이 더 높이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비드의 작품이 부인의 품격을 훨씬 잘 드러낸 명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말이다. 제라르는 고대 분위기를 낸답시고 배경을 번잡하게 묘사해 주인공의 내면성을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지만 다비드는 배경을 생략하고 단순미를 강조한 고대미술의 이상을 따름으로써 레카미에 부인의 고상한 품격을 성공적으로 시각화했다. 고전미술의 위대성과 다비드의 작가적 역량을 입증하는 혁명기의 명품이다.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sukbumj@naver.com

프랑스 파리대학 미술사학 박사.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원」 등이 있다.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경제위기와 언론의 반성

유럽의 네 번째 경제대국 스페인은 불과 5년 전인 2007년에 만 해도 재정이 건전한 나라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6.3%에 불과했다. 독일 65.2%, 프랑스 64.2%보다 낮았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87.9%(OECD 집계)로 올랐고 1천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로 전락했다.

스페인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표면상으로 30%대 수준이지만 정부보증 및 공기업부채까지 합치면 50%에 육박한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1천조원을 더하면 80%에 육박한다. 게다가 스페인이 위기로 빠져드는 경로를 보면 너무 걱정스럽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가 망가지면서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은행부실로 전염되는 스페인의 위기과정이 최근 우리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더 심화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금융현장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취재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제부 부데스크로서 신문을 만들었던 기자의 판단으로는 지금 상황이 2008년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느낌이다. 어두운 뉴스들이 온갖 곳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 체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정말 어느 순간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버릴까 겁이 난다.

기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라 왔음에도 위기경고를 보내지 못했다. 우리 시장을 흔들어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는 거대 국제투기자본의 의도가 결과

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 IMF의 강력한 고금리 처방으로 멸절한 기업들이 부도나는데도 별 문제 제기를 못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하니 그렇다고 다그쳤다. 이 땅의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다. 지식이 짧았고, 글로벌 시장을 꿰뚫어볼 수 있는 혜안도 부족했던 점,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난 지금 경제부 데스크로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난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이어 이탈리아 위기설, 영국·독일 국채 값까지 떨어지는 유로존의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과 미국경기도 유로존 위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수출로 버텼던 우리 경제에도 갈수록 주름살이 깊어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위기인식이나 대응책이 안이한 건 아닌가 걱정이다. 경기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통화와 재정정책 양면에서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제대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추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균형재정의 기초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표 얻는 데만 급급해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 언론이나 학자도 모두 밀려오는 위기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치밀하면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호가 두 번씩이나 좌초되는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정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미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12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 주최 | 기획재정부 · KDI | 후원 | 세계미래포럼 · 매일경제

응모기간 : 2012. 8. 1 ~ 9. 17

| 공모 주제 |

- ▶ 100세 시대 대책, 양극화 해소 대책, 다문화 가정 증가의 영향과 대책, 중장기 에너지 대책, 인터넷 통신망 붕괴와 대책, 정보기술 접근성 격차와 빈부격차 해소방안 등 택1

| 참가 대상 |

- ▶ 2012년 9월 현재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생 및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 고등학생 부문은 한 학교당 2편 이내로 제한 접수(학교장추천서 첨부)
 - * 대학생 · 고등학생 부문 모두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참여자 모두 자격기준 충족 시)

| 응모 형태 |

- ▶ 논문(대학생), 논술(고등학생)

| 일 정 |

- ▶ 응모 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7일
- ▶ 응모 방법 : 온라인 응모(www.miraekorea.org)
- ▶ 결과 발표 : 2012년 11월중

| 시상 내역 | 입상작 총 20편, 상금 총 2,400만원

	대학생 부문		고등학생 부문	
대 상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600만원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부상
최우수상	1편	KDI 원장상, 상금 400만원	1편	KDI 원장상, 부상
우 수 상	3편	후원기관장상, 상금 각 300만원	3편	후원기관장상, 부상
장 려 상	5편	후원기관장상, 상금 각 100만원	5편	후원기관장상, 부상

※ 고등학생 부문은 상금 없이 상장과 부상만 수여

| 문 의 |

- ▶ KDI 경제정보센터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TEL : 02-958-4635 / E-mail : mirae@kdi.re.kr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www.miraekorea.org) 참조



쿨맵시로 2°C 시원한 여름

쿨맵시로 냉방온도 26°C~28°C 유지하기



Up!

실내온도 2°C

체감온도 2°C
DOWN!

녹색생활 홍보대사
가수 이현우

녹색생활 홍보대사
기상캐스터 오수진



쿨맵시의 패션과학

통기성과 환기성을 도와주는 굴뚝효과와 펌프질 효과로 체열과 습기를 쉽게 배출시켜 체감온도를 2°C 낮춰줍니다.



쿨맵시의 1x3조 효과

쿨맵시는 냉방비 절약, 냉방병 예방, 온실가스 감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 선택 노하우

가볍고 얇은 옷감과 밝은 계통의 의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